

7. 언론권력 정상화(언론개혁)와 정치개혁 등을 비롯한 다른 분유개혁과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한반도평화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언론개혁은 선결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8. 그러나 언론개혁을 추동할 내적 동인이 부족하다. 정부의 역할은 언론기업정상화를 위해 법적용을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용규제를 위한 언론개혁의 주체는 언론인, 독자, 사회운동단체 및 진보적 학자들일 수 있으나 개혁대상 언론사의 경우 내부추동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독자와 사회운동단체, 진보적 학자들이 언론개혁을 추동해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전체토론3

우리의 조직문화 생각하기

활동가 나 돌아보기

이천삼년 이월구일 오전 아홉시부터 열한시까지

사회 이승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주제1 조직문화 - 내부민주주의, 잘 되고 있습니까?

토론1 김은숙 환경운동연합 간사

토론2 김은주 대학노련 정치위원장

주제2 활동가, 너의 오늘과 내일

20대 장상미 함께하는시민행동

30대 주계준 민중연대 조직국장

40대 김경희 대전여민회 사무국장

시민단체 조직 내 활동주체들 간의 긴장과 반목, 그리고 소통과 민주주의

김은숙(환경운동연합 간사)

“사회포럼 2003 연대와 전진”에서 이번 주제의 토론에는 토론자가 20대여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나도 30대를 향해 거의 도달한 처지지만 조직 내에서 20대가 그리 많지 않았던지라 극구 마다할 처지도 못되었던 탓도 있었고, 그래도 시민단체에 들어와 2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활동과 조직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 토론을 쉽게 수락했다. 그런데 막상 하겠다고 하고 나니 의문이 들었다. 왜 토론자가 꼭 “20대”여야 하는가?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을 “20대”를 기준으로 굳이 구분해 보자면, 30대 이후와 20대는 그들이 겪었던 시대 상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금의 “20대”는 70년대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대는 너무 어렸고, 지금 30대의 선배들이 거리를 누비며 민주화를 외치던 80년대에 초등·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90년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머리가 커지고 사회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가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민주화의 정착 과정에서 시민운동이 그 역할을 찾아나가며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지금의 20대는 과거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운동적·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사회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현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행동의 정치”에서 “참여의 정치”로 이전되고 있고, 그 과정에 지금의 20대의 역할이 결정적인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운동방식을 고수하고 조직 내부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개혁적이고 보다 열려있어야 하는 시민단체가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현재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과거 민주화운동의 토대로 생겨나고 발전했지만, 제대로 사회 속에서 다시 자리잡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대의 시민사회 바라보기가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번 토론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아래에는 주로 시민단체 활동주체 들간의 여러 측면의 긴장관계를 설명하고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주로 개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더 폭넓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선배와 후배간의 운동방식에 대한 지향의 차이

‘조직에서 연차가 낮은 활동가가 줄어들고 있다!’, ‘새로 들어온 활동가들의 이탈률이 올라가고 있다!’, ‘조직이 노령화되고 있다!’ 라는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환경연합을 예로 들면, 현재 서울에서 함께 있는 활동가 전체 중에 20대가 21%인 반면, 30대는 64%이다(40대 이상은 16%). 20대 활동가보다 30대 활동가의 비율이 3배정도 높다. 2001년 초에 활동을 시작한 9기는 13명이었고 그 중 6명이 20대였다. 그러나 9기 중에서 현재 30대 이상인 1명이 조직을 나갔으나 20대는 6명 중 필자 혼자만 남았을 뿐이다. (참여연대의 경우 20대 26%, 30대 67%, 40대 7%)

20대 후배활동가들의 자리매김의 실패는 선배와 후배간의 문화의 차이와 갈등에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결연하고 치열하며 헌신적인 사회운동을 추구하는 선배들과 민주적이고 다양성이 보장되며 개인적 성과와 만족도가 높고 전망이 있는 운동을 원하는 후배들간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시민운동의 전반을 이끌고 있는 선배들이 경험했던 학생문화는 비교적 균일하여 융합이 비교적 쉬운 반면, 후배들의 문화는 개인적 경험과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존의 균일한 학생운동문화로는 억지로 묶여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소통과 조정을 통해 조직문화를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존의 “운동권 문화”로 수렴시키거나 운동자원을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20대 자리찾기는 운동방식과 문화에 있어서 보다더 열린 조직구조 속에서 20대 자신들이 (견고해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조직을 새로운 방향으로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이 되지 않은 한 극복될 수 없는 문제다. 지속적으로 운동의 동력이 유출되고 운동조직의 구성원들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과거의 운동방식과 조직구조를 고수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역동적인 사회참여와 변혁을 꿈꾸는 것은 일면 모순적으로 보인다.

활동가의 의견과 “조직적 결정”과의 간극

의사결정 단위를 둘러싼 의견수렴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가? 활동가의 의견이 얼마나 조직적인 결정에 반영되는가? 활동가는 조직적 결정에 만족하는가?

조직내 의사결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환경연합의 경우,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는 총처장단회의(사무총장, 처장, 부설기관 소장 등)와 중앙집행위원회(사무총장, 처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지역 환경연합 의장 등)이다. 그리고 주요 의견수렴 단위로 처, 팀별 의견수렴과 전국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처장단회의, 평간사들의 의견수렴 단위로 평간사 회의가 있다.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주로 팀별 회의를 거쳐 그 내용이 총처장단회의로 올라가고 중대사안일 경우 중집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의견은 고려되거나 설득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하달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조직적(?)인 결정에 활동가들은 “의사결정기구가 결정했다”는 이유로 따라야만 하고 조직적 결정에 따른 실제 실행은 활동가들이 감내해야 한다.

왜 활동가의 의견이 고려되지 못하고 다른 방향에서 결정되는 일이 잦아지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활동가의 생각과 임원(의사결정 단위의 사람들을 총칭)들의 생각의 차이가 심할 경우로 운동경험의 차이나 역할의 차이에 의한 사고의 분리가 극심할 때 나타난다. 또 하나 이유는 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각에 활동가들의 생각을 고려하고 접점을 만들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로, 서로의 의견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며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이다. 둘 중 어떤 이유이든 간에, 임원과 활동가들의 의견대립은 점차 불신을 키우며 서로의 의견과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그것이 활동의 부진과 조직생활의 침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참여와 정책에의 민주적 참여를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내부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신은 올바른 시민운동으로의 방향마저 흐리게 하고 있다.

상근 활동가와 비상근 활동주체간의 긴장관계

상근 활동가와 비상근 활동주체(전문가와 시민)간의 밀접한 관계맺음과 활동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은 환경운동의 대중성, 전문성과 정책화, 그리고 실질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관계의 밀접도에 따라 상근 활동가와 비상근 활동주체 간의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각 단체의 특성과 조직 분위기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고, 이를 극단적으로는 [활동가중심 단체], [전문가중심 단체], [회원중심 단체]라고 특성별로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각 단체에서 활동에 따라서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활동가중심 단체]는 상근활동가들 중심으로 운동 방향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의사가 결정되고 전문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회원·시민은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여”한다. 이 경우, 시시각각으로 터지는 사안들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빠른 시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을 강력하게 환기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전문가와 자원활동가의 지속적인 협력이 어렵고 따라서 치고 나가는 공격적인 운동은 잘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화하고 대중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은 어려워진다. 반면, 전문가들 중

심으로 꾸려진 위원회(혹은 센터)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전문가중심 단체]는 위원회 주요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활동이 계획되고 추진되며 여기에 활동가가 함께 일을 실행하는 형태다. 이 경우에 내용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으며 대안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사안의 사회적 의제화가 어렵고 자원활동과 회원활동의 가능성이 더욱 좁혀질 수 있다. 또한 활동가들의 생각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이 활동가들의 입장과 달라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 분류될 수 있는 [회원중심 단체]는 회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문제의 사회적 의제와 정책화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러나 운동의 역동성과 전문성, 대중성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 특성들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안제시와 시민의 참여가 주요한 사회 운동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지금, 활동가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각자의 역할과 과제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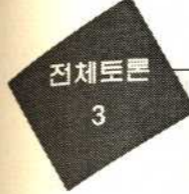
* * *

지금까지 논의한 갈등의 주체들-20대와 30대, 활동가와 임원, 상근활동가와 비상근전문가·시민 등-는 시민운동, 환경운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주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가 뼈그덕 거리고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적관계의 “골”은 조직의 관료화, 활동의 정체, 활동주체의 빈곤 등으로 표출된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제부터가 논의의 시작이다. 몇 가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이 어려운 주제를 이제 토론장으로 넘겨야겠다.

먼저, 선·후배간의 운동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 특성을 인정하고 열린 조직이 되어야 한다. 나름의 조직문화와 발전·계승시켜야 하는 운동적 전통은 오히려 분명히 하고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되 한편으로 새로이 제안되는 운동방식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서로간의 이해를 통해 함께 시민운동을 이끌어어나가기 위한 세대별·직급별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의사결정 구조는 있으되 누구나 넘나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의사결정 구조의 구성원은 주기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며 누가 의사결정단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정이 다르지 않을 만큼의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구조화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구조의 구성원은 이러한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위한 민주적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독단적이지 않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한 단체들 간의 열린 조직이어야 한다. 조직 내부의 문제와 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의 시각이 결정적이다. 특히 함께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들의 상호간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단체들간의 자체적 운동문화와 특징을 인정”한



남성중심적 문화 다시보기

김은주(대학노련 정치위원장)

테두리 안에서 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운동을 벌여나가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에게 열린 조직이어야 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주체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각이 결정적이고, 활동가의 시각이 아닌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시각이 운동의 순수성과 초발심을 일깨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은 시민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사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민주사회단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민주사회단체' 현재에 존재하지만 현재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춰서 부조리를 꼬집어내 그것을 올바르게 세우고, 현재의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물을 걸러 내는 필터역할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사고와 실천은 모든 민중의 미래적 희망을 실제로 가능케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사회단체'는 '희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민중의 미래적 희망을 실현시키는 '민주사회단체'가 과연 여성에게도 똑같은 의미로서의 역할과 존재로 다가왔을까요? 적어도 과거만을 돌아볼 때 대답은 'NO'입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면서 가장 평등해야 할 곳에서 우리 여성들은 비민주성과 보수성, 그리고 불평등을 온 몸으로 겪으며 때론 좌절하고 때론 분노하며 힘겨운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내부의 민주성과 진보성, 평등에 대하여는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성 자신들에게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운동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하면서도 그것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은 치열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자리가 조직문화를 되돌아 보며 민주와 진보와 평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속한 노동조합 조직내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결정구조에서의 남성중심성

노동조합에서 의사결정구조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조직의 특성을 노조의 운영구조와 잘 맞춰서 민주성을 담보하고, 그곳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노조활동의 중심 내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의 참여는 극히 저조합니다. 이는 곧 여성의 저대표성을 의미하며, 여성조합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여성조합원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과 대의원 비율 중 여성은 각각 6.97%,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조직현황(2000년 자료)

조직	노조수	전체조합원수	남자조합원수	여자조합원수	비율
전체	5,637	1,480,666	1,173,239	307,427	20.8
한국노총	4,051	888,503	720,495	168,008	18.9
민주노총	1,256	564,774	433,207	131,567	23.3
미가입	330	27,389	19,537	7,852	28.7

이와 같은 현상은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뿐만 아니라 단위노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저대표성을 개선하고자 민주노총에서는 중앙위원과 대의원에 여성을 30%이상 할당하는 규약을 개정하였지만 그것도 당장에 실시하지 못하고 2004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여성할당제를 대하는 남성동지들의 태도입니다. 여성할당제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도기적 적극적 조치라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동지들의 경우 이를 적극 반대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30%는 너무 많다'에서부터 시작하여 '할당제는 역차별이다' 할당제를 채택해도 채울 사람이 없다' 여성들의 능력이 아직은 모자라다'등등 진보적 단체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원색적인 이유들을 늘어 놓았습니다. 결국 할당제는 통과되었지만 할당제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남성 동지들의 반민주성과 보수성은 여성활동가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 주었고 조직내 양성평등의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의 저대표성 이외에도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 역시 비민주성을 안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성들은 논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자연히 정보의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노동)운동의 특성상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주변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소외되다보니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동지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곤 합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진정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단 할 것입니다.

3. 노조내 일상활동에서의 남성중심성

1) 교육

노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의 내용 중 여성과 관련된 혹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의 교육담당자들 중 여성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본인의 성인지적 사고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관련 교육은 여성부장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 일정도 숙박교육이 많아 아이를 둔 기혼여성들의 참여가 쉽지 않고, 주로 노조활동과 선전선동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이러한 교육 역시 남성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선동교육의 경우 목소리 크고, 과격한 남성노동자의 이미지가 많이 강조되곤 합니다.

2) 선전

예전에 민주노총에서 제작된 포스터 때문에 여성단체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IMF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일하러 가는 남편 뒤에서 아이를 업은 여성이 남편을 향해 '당신 만이 희망입니다'라고 배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해고의 칼날이 가장 먼저 여성에게 휘둘러졌고, 노동권을 박탈당한 채 그 고통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성들에게는 충분히 분노스러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포스터를 제작한 것은 민주노총이 얼마나 여성문제에 대해 문외한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노조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선전물에는 투쟁하는 남성노동자들이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내용 역시 딱딱하고 과격한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전물을 만드는 주체들의 의식 속에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투쟁은 주로 남성들이 하는 것이고, 과격한 것이 투쟁을 잘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성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지요.

3) 정책·기획

노조에서 정책·기획부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각종 사업계획과 투쟁계획, 정책들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부서에 여성이 담당자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때문에 여성 관련한 정책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계획의 내용 속에 여성 관련 사업은 항상 주변으로 밀려나기 일쑤지요. 주요 투쟁과제를 정할 때에도 여성관련 과제는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계획안 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지만 주장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문화

우선 집회문화를 살펴보면, 중요한 집회의 사회자는 대체로 남성이 맡습니다. 발언자도 남성이 많고, 단상 위에 올라 와서 이야기 하는 방식도 목소리 크고 욱 잘하면 일단은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의문화도 여성에게는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딱딱하고 경직된 회의운영방식, 기혼여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늦은 회의시간은 여성의 참여를 제한할

니다. 이 외에도 술문화, 뒷풀이문화, 노래, 율동등 각종의 문화영역에서 남성성이 강조되고 남성중심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지요.

5) 조직

민주노총의 주요 조직구성이 대기업 남성노동자 중심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대체로 남성동지들로 채워져 있고, 조직하는 방식도 남성중심적입니다. 얼마 전부터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계의 핫 이슈입니다. 비정규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치 선진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을 만큼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노동자입니다. 이는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와도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를 제대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맞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정규 조직사업 담당자들은 이러한 이해가 없습니다. 비정규조직화도 기존의 방식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역시 대기업 남성 비정규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임단투 과정에서의 남성중심성

노조활동의 꽃이라고 일컫는 임단투에서도 남성중심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교섭위원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단위노조나 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여성이 있어도 한 두 명 정도 극히 소수가 참여하고 있어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충분히 전달되거나 수렴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구성된 교섭위원으로 교섭을 진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쟁점이 추려지게 됩니다. 쟁점을 추릴 때에도 여성관련한 사항은 쟁점에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타결내용 역시 여성관련한 내용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처럼 노조활동의 꽃인 임단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참으로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의 단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노조활동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5. 투쟁에서의 남성중심성

노조활동에 있어 투쟁은 필연적입니다. 투쟁방식이 너무 과격하다거나 거칠다는 문제를 곧장 남성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쟁방식은 그 당시 상황의 절박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하면 남성적이고 과격하지 않으면 여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하는 투쟁방식에는 여성들의 참여를 가로막거나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철야농성을 해야할 때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기혼여

성들의 경우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단식이나 삭발을 해야할 때에도 남편눈치, 시댁눈치 때문에 마음껏 투쟁도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거 저런거 다 따지면 투쟁은 언제 하느냐, 결국은 하지 말란 소리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여성들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역할을 나누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배려를 귀찮게 생각하거나 여성들은 제대로 투쟁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6. 성희롱·성폭행

최근 몇 년동안 성희롱·성폭행 문제로 인해 많은 내홍을 겪은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희롱·성폭행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성희롱·성폭행이 발생했을 때 민주사회단체 내부의 조직적 혹은 개인적 반응과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 등 일반 사업장에서 성희롱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보여준 사용자의 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을 이해하고 제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조직의 위신을 먼저 앞세우고 쉬쉬하며 은폐하려 했고, 성희롱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는 그 조직을 떠나거나 성희롱을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 반면, 가해자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자기일을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7. 해결방안

사실 해결방안은 문제점을 거꾸로 놓고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남성동지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진보적임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할당제를 도입할 때 보여준 남성들의 태도, 그리고 여성문제를 제기할 때 "아휴 또야? 그만좀 해라"라는 식의 반응은 양성평등은커녕 이땅 절반의 여성들을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게 될 것입니다.

민주와 진보와 평등은 쉽게 이룰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호만 크게 외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부터 차근차근 결의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들이 달라졌습니다.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투쟁하며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자리를 계기로 민주와 진보, 평등의 문제가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보다 실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것이며, 그것이 결국에는 전체 사회의 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와 진보, 평등을 향한 길에 남성동지들과 여성동지들이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례

영국 UNISON 노조의 경우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각종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 중 여성조합원이 전체의 30%에 불과한 영국의 운수일반노조가 지부에 내려보낸 집회시의 체크리스트이다(TGWU, 1999).

- 여성조합원들이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가?
-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엘리베이터가 조직되어 있는가?
- 집회장소가 당혹스럽지는 않는가?
- 다른 시간에 열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 지부는 탁아수당을 지불하는가?
- 탁아수당의 존재를 여성조합원들이 알고 있는가?
- 여성조합원들이 집회와 활동에 대해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가?
- 지부들은 개방적이고 친근한 스타일로 운영되고 있는가?
- 어려운 용어나 약어들은 피해지고 있는가?
-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논쟁들이 조직되어 있는가. 그리고 집회가 재미있는가?
- 지부는 집회 이후 친목도모를 위한 호프집이나 기금모금을 위한 모임, 디스코 등을 조직하고 있는가?



20대 활동가, 나의 오늘과 내일

장상미(함께하는시민행동)

내가 태어난 해는 제1차 세계여성대회가 치러진 해이다. 베트남전쟁이 완전 종결된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성성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예언과 함께 시작된 21세기를 살고 있다. 그 여성성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조짐은, 구약성경에서 엘리야가 3년 가뭄을 종결지을 큰비가 오리라라는 예언을 하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던 장면과도 같이 좀처럼 내 앞에 드러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금 슬프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슬픔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역시 희망이다. 인간성에 대한 신뢰. 더 나은 어떤 세상에 대한 기대.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무슨 해답이 보일 텐가. 끝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은 엘리야 앞에 곧 정말 큰비가 내려 가뭄을 끝장내어버렸던 것처럼.

천성이 싸우는 걸 싫어해서 어릴 적 친구와의 다툼에서도 맞서는 일 없이 침묵을 지키곤 했던 내가 그토록 시끌벅적하게 싸워가는 동네인 사회운동에 몸담게 된 것은 사실 나를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나 빼고 모두가 네 적성이라고 입을 모으던 의류학을 전공하며 학생운동은커녕 사회가 돌아가는 데에는 또래들과 꼭 같은 약간의 냉소를 지닌 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던 내가 문득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고 전혀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으니 말이다. 왜 그랬냐고 수없이 질문을 받아보았지만 나는 한번도 속 시원한 대답을 찾아낸 적이 없다. 다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왔고, 더 이상은 위선 속에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 정도로 그치고 만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사년째이다. 활동가로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기간으로 정했던 십년 중 삼년이 벌써 지난 것이다.

처음 기반을 닦는 의미로 1년을 독학하며 보낸 후 성공회대 NGO학과에 진학했고 또 1년이 지난 후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상근을 시작했다. 십년을 내건 나만의 프로젝트가 시민운동으로 그 첫발을 떼게 된 데는 당시 언론의 폭발적인 주목을 받던 총선연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후, 신문기사들로부터 출발해 시민운동, NGO를 키워드로 자료를 모아가면서 처음 생각과 달리 그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인터넷 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생각 끝에 끄꿍대며 혼자 힘으로 NGO에 관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때 나의 모토가 맨땅에 헤딩하기였기에. 애지중지 밤샘불사. 공부하는 내용을 그 사이트에 간간이 정리해 올리면서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시도로 꽤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참 재미있었다. 처음의 간소한 목표와는 달리,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스스로 인터넷이 가진 무한한 소통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그 물결과 함께 흐를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NGO학과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은 나에게 늘 신선한 자극을 준다. 이런 세계가 있으면 또 저런 세계가 있고.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다양한 인권담론, 소수자운동, 생태주의, 평화운동, 공동체... 배움의 길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성실함과 겸손함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정직함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게 될 뿐이라는 말. 맞다. 매일매일 아 내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구나 외치게 되는 요즘, 그 많은 '내가 모르는 것들' 앞에서 때로는 길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모르는 것들'을 숨기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하여서 날마다 배워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시민행동에서 상근을 하면서는 바로 위와 같은 나의 소망이 때론 활동의 의지를 꺾으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잘 모른다는 두려움, 판을 읽을 수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겠다는 소심결벽증이 내 안에서 번번이 침묵을 강요하고 아이디어를 사장시킨다. 나에게서 앞세대와 같이 차례차례 학습을 이끌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준 스승이나 선배가 없다. 게다가 변화하는 사회와 억압적인 교육문화 속에서 분열적으로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내 개인의 처지라기보다는 또래세대가 함께 안고 있는 한계다. 이것이 그냥 한계가 될 것인가, 수평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여는 디딤돌이 될 것인가. 그런 과도기에 바로 지금 이십대 활동가로서 내가 위치하고 있다. 냉소와 무관심에는 끝없는 심연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위치에서 나는 비판이 아닌 낙관으로 몸을 돌린다.

21세기 여성성과 평화의 세기가 과연 도래하도록 끊임없이 나의 감성을 깨우고, 용기를 북돋우며 그로부터 인간성에 대한 신뢰, 더 나은 어떤 세상에 대한 기대를 새록새록 키워갈 원동력을 얻고자 한다. 이성의 지배가 그러했듯이 또한 감성의 매몰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즐거운 성찰을 계속하고자 한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 된다. 어릴 적부터 가져온 억압 얇는 삶과 사회에 대한 막연한 소망, 경쟁보다는 연대라는

나의 가치관에 솔직하고 싶고, 지금 거기에 가장 맞는 길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꼭 시민단체 상근활동가라는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나는 서로 다른 여러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만 그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은 언제나 동일한 색채로 채워지고, 나로부터 나오는 파장은 언제나 같은 물결로 사람들을 흔들 것이다. 또한 그 색채와 파장은 저 혼자 독야청청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이웃 색채와 파장들과 어울려있을 때 정말 재미난 그림을 그려낼 것이다.

(*)



30대 활동가, 나의 오늘과 내일

주제준(민중연대 조직국장)

민중운동진영의 상근자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쥐꼬리만한 상근비, 해도 해도 끊임없이 쌓여져 있는 일들. 저 사람들은 무슨 열정으로 저런 일을 할까 싶은 민중운동 진영의 상근자들.

집회 때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모습이나, 무섭게만 보이는 전경과 백골단과 맞서 당당히 싸우는 모습. 그리고 처절하게 끌려가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모습들. 내가 대학시절 사회단체의 상근 활동을 하는 선배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논리적 사고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너무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 때로부터 10여 년이 흐르고 나는 그 선배의 위치에 서있게 되었다. 10여년 전의 상근 처우와 거의 변함 없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하는 상근비와 넘쳐나는 일들. 몇 시간씩 계속 되는 회의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많은 집회와 수련회와 당직이 바로 나의 일상이 되었다. 나의 후배들이 예전에 내가 우러러 보았던 그 선배들처럼 나를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는 98년 사회단체 상근 활동을 시작했다. 2년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이라는 단체에서 상근하다가 지금은 전국민중연대의 상근자로 일하고 있다.

상급단체 일수록 가난해 지는 민중진영

내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된 후에도 나는 민중대회가 있는 전날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집에 들어간다. 왜냐면 집회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 연행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나의 전적상 구속은 거의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리 암시할 수는 없지만 만일을 대비한 내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 보통 민중진영에서 조직부장, 국장이라는 이름은 거의 조직과 투쟁을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직함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2,3개쯤의 소환장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다. 소환장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소환장이 금세 따라 붙는다. 우리 어머님이 그랬듯이 안사람도 마찬가지로 보이다. 매번 받는 소환장인데 적응이 되지 않는 건지 소환장이 날라올 때마다 놀라곤 한다.

결혼은 나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다. 장인 어른의 입장에서 2남 2녀중 막내로 30여년을 고이 키운 딸자식을 평생의 반려자로 내어 주기에, 나는 참 못미덥고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지금의 아내와 4년 연애를 하고 어렵게 결혼하자고 결정했지만 나의 결혼전선엔 예기치 않은 난관이 많았다. 그 당시 아내를 데리고 있던 처형 식구들의 끝없는 반대도 그렇지만 사지 멀쩡하고 젊디나 젊은 사윗감이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 딸이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얘길 들으신 장인어른께서는 나를 마치 '한량' 정도로 여기시고 처음 인사드리러 처갓집을 찾은 날 인사도 받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셨을 때는 너무나 난감했다.

집안 끼리의 상견례가 끝난 후에도 우린 헤어질 뻔한 고비를 한번 넘겼고, 결혼은 다시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 원인은 물론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나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여하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다음 달이면 한 아이의 아빠가 되지만 아직도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나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술은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매개가 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기도 하지만,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술자리가 연일 이어지다 보면 간에서 채 해독이 되기 전에 다시 취하고, 그러다 보면 아침 시간에 회의가 잡히거나 일정이 있는 날은 더 이상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아침까지 깨이지 않는 술기운은 나를 졸음으로 내몰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거리는 나를 채촉한다. 결국 오래지 않아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지만 이러한 일상의 반복 속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루 하루 나의 몸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올해의 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다.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조합원이 분신자살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그 곳을 지나쳐 공장으로 들어갔고 기계는 계속 돌아갔다고 한다. 박용성 회장의 악랄한 노조탄압에 불신만이 팽배해진 결과였다. 배달호 열사의 죽음으로 쟁점화 되었던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진 날 저 아래 제주의 한라병원에서, 발전노조에서, 철도노조에서, 재능교사노조에서 이 '손배, 가압류' 문제로 인해 노조와 노조간부, 조합원들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잘 볼 수 있었다. 배달호 열사 또한 총 3,000천억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의

이 '손배,가압류'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러한 고통으로 수백 수천의 조합원이 절망하고 있으며 그를 포함한 가정과 공동체가 얼마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지 뼈저리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발표를 할 때 장기투쟁을 하는 사업장에서 '질긴놈이 이긴다'는 말이 돈없고 백없는 노동자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 인지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뿔뿔이 흩어져 자신에게만 닥쳐 온 헤어 나오지 못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고리로, 작은 불씨로 다시 지펴졌다.

그들 속에서 난 다시 희망을 보았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신념을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있는 이들과 나누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뜨거운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만들고 있었다.

농민들의 작년 10만이 이르는 집회를 개최했다. 민중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10만 집회가 개최되는 날 서울 시내를 완전히 마비 될 것이며 사상 최대의 집회를 장담했다.

그리고 11월 13일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상경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난장'은 벌어지지 않았다. 아니 피울 수 없었다. 그 대부분의 농민들의 육순을 넘었고 칠순, 팔순이 이르는 노인들의 대다수였던 것이다. 저분들이 어떻게 이 추운 날 한강바람이 드센 고수부지에서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했다. 마음이 무거워 졌다. 거대한 WTO 수입개방을 저 육순 칠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난 전농의 활동가 토론회에서 이러한 나의 생각은 잠깐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토론했다. 무려 5시간이 넘는 토론의 진행하면서 물리적인 연령층은 장년이지만 농업, 농촌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걱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는 '청년' 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토론회에서 꿈틀대면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를 통해 나는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 그들에겐 희망이 있다. 우리들의 희망이다.

난 오늘도 저녁때가 되면 이곳저곳에 연락을 한다. 그리고 늦게까지 때론 새벽까지 진행되는 술자리에 앉아 있다. 일 얘기 뿐만이 아니라 저마다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얘길 듣는다. 열띤 토론일수도 있고 진지한 상담일 수도 있고 때론 눈물일 수도 있다. 당연히 술값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새벽에 귀가할 때면 아내의 잔소리를 듣지만, 나는 그 시간을 놓칠 수 없다. 늦은 술자리 탓으로 인해 술이 덜 깬 채로 다시 지하철로 뛰어가는 힘겨운 하루가 시작이지만 내 마음 속에는 예전에 앞서 갔던 선배들이 그런 것처럼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 마른 가슴의 누구에게 지퍼 줄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다.

나와 운동의 행복한 만남(?)

김경희(대전여민회 사무국장)

1. 난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 1) 나의 철학, 삶의 방향, 신념은 무엇인가?
- 2) 나는 왜 여민회에서 활동하는가?
 - ① 조직 활동의 필요성
 - ② 책임의식
 - ③ 모르는 것이 약이다? 무식이 용감
 - ④ 인적구성→사업을 통한 조직의 안정화→조직체계수립→운동방향 재설정
- 3) 나는 행복한가? 아니면 왜 인가?

2. 난 어떻게 변했나?

- 1) 긍정적
 - (1) 시야가 넓어짐 (문제해결 능력)
 - (2) 고급의 압축된 정보 습득
 - (3) 공부하는 방법, 효과적인 자료정리 - 원고, 방송
 - (4) 성취감 높음 (활동가로서 성장하는 나)
 - (5) 주변인으로부터의 신뢰 (친구, 가족, 그 외)
 - (6) 사회적 활동범위 넓어짐 - 다양한 인맥형성
 - (7) 미래에 대한 전망 모색 - Past, Present, Future
 - (8) 긴장감속에서 솟아오르는 욕구 - 재충전의 욕구, 사업의 스텝이 아닌 운동의 주체, 전체운동의 흐름 감지
- 2) 부정적
 - (1) 친구를 잃음
 - (2) 자신만을 위한 시간 갖기 힘들 (잠을 줄여야.....)
 - (3) 활동범위가 제한적

- (4) 용기가 없어짐 - 결과에 대한 해석이 앞섬
- (5) 건강에 대한 염려
- (6) 잔 실무의 연속

3. 난 어떻게 살 것인가?

- 1) 오래지속하기
 - (1) 여성운동은 세상과 인간을 바꾸는 일이라는 확신 갖기 (내면화)
 - 현장속에서
 - 공부하면서
 - 동료, 선배와의 나눔속에서
 - (2) 여성운동은 나를 성장시킨다는 믿음 (자기발전의 확산)
 - 나의 정체성 확립 (성향과 관심 찾기, 가장 하고 싶은 일)
 - 나의 성장이 조직의 발전
 - 여유, 성찰, 가끔의 시간과 공간 만들기
 - 일의 유형 바꾸기 (비상근...)
- 2)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
 - (1)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인력 발굴 → 양성, 재정·공간 마련)
 - (2) 활동가들의 쉼터 마련 → 평생 동지
 - (3) 일이 아닌 삶의 선배로 (언니, 동생) 정서적 지지망 마련
 - (4) 다양한 여성 자원활동 영역개발 → 지역간 네트워크 조성
 - (5) 신나고 재미있는 삶과 밀착된 여성운동 실시

4. 후배들아! 우리, 이렇게 하자.

- 1) 자신에게 솔직하자 - 모르는 것 인정, 도움요청
- 2)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 부모, 친구, 남편, 아이, 이웃...
- 3) 꿈(Vision)을 갖자 - 지위 지향 보다는 목적 지향
- 4) 노력하자(時테크) - 전문성 확보
- 5) 재미있게 운동하자. 생활과 운동이 일치 되도록
 -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화”

특별토론

아시아 반전평화운동의 탐색

Investigation of ASIA antiwar and peace movement

이천삼년 이월팔일 열한시부터 십삼시 삼십분까지

사회	강정구	동국대 교수
발제1	일본의 반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	Muto Ichiyo(People's Plan21 대표)
발제2	한국의 반전평화운동과 국제연대	김광일 (다함께 반전활동가)
토론	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박기학	자통엽 정책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성준	비폭력평화연대 공동대표, 성공회대

**ANTI
WAR**

일본의 반제평화운동과 국제연대

Muto Ichiyo People's Plan 21대표

I. State level relations

A. US factor bilateral relationships unified at US end; intra-NEA relationships functional to US strategy

US post cold war strategy 1995

Nye: 100,000, uncertainty as the enemy; strategic shift to Asia (2000 guidance)

"Shape, repond, prepare,"

Japan: 95 Okinawa upsurge, SACO 1996 joint statement new guidelines; more commitment than in CW

North Korea 1994 crisis agreed framework, transition to KJI, food

crisis; N-S summit, Sunshine, Albright visit to Pyongyang 2000; ;

China engagement, Taiwan strategic ambiguity

Bush strategy

Bush-Chaney-Rumsfeld strategy allowing no rival, full spectrum dominance; unilateralism; US over int'l agencies; but not full-brown until 911.

NK reversing Clinton policy, indifference

China strategic adversary, at first neo-containment

After 911, global pacification key areas central Asia-Gulf, Israel as the key post; Afghan war;

2002 declaration of Empire; axis of evil hostility to N. Korea; displeasure with Kim Daejung; Bush doctrine in Sept.; Iraq as target,

B. Japan factor

Guidelines and related laws 1996-97, rise of rightwing (text books), trans-party

rightwingthrust; door opened to SDF deployment overseas, 1999 Aug. national flag and anthem and other reactionary laws; Koizumi structural reform (neo-liberal privatization); Yasukuni, text books; 911 full support to US Afghan war, fleet deployment to Indian Ocean Aegis ships deployed as rear support for Iraqi war

2002 Sept. Pyongyang joint statement definite change of policy? Yes and no: Abduction media hysteria about NK; rightwing carrying the day; no consistency; no questioning US war against Iraq; but support Bush;

C. N-S Korea factor

Agreed path to autonomous solution, but US-S, US-N relations always as intervening factors (dating from Korean war); on top of it, crisis in N, potentially regime crisis, leads it to nuclear brinkmanship, taking advantage of impending Iraq war and the EA geopolitical configuration (China, Russia, Japan, SK); lack of resource interest; but brinkman approach has its limits;

D. China factor

China, emerging as big economic power, interested overwhelmingly in relationship with US rather than neighbors; internal problems may become uncontrollable, rural and unemployed urban workers, forcing new gov't to take palliative measures; making China inward looking; could play a decisive role vis--vis N crisis

II. Peace course by sub-regional multilateral arrangement

US-SK-Jp core should be replaced by SK-NK-Jp-China-Russia consortium away from US bilateral control on SK initiative; momentum of Roh Muhyeon presidency; similar to Helsinki process; pressing US to normalize relations with NK, removing pressure (military, diplomatic, economic) off Pyongyang and encouraging NS exchanges (NS problems proper should be left to the two parties);

III. Peace movement

A. Peace movements for the peace course, building up pressure on respective governments; groups closer to governments can take their own initiatives in this.

B. Popular social movements should take stand on the US imperial design, especially its illegal claim to the right to dictate its terms to the world and to dispose of other governments even militarily. In this context, full effort should be made by all Asian social movements to oppose invasion of Iraq. This is not some other country's affair. War has already been brought into the Philippines, Indonesia, Pakistan etc. and military

bases in Korea, Okinawa, mainland Japan are used for the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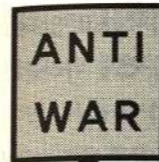
C. More basic is the development of people-to-people alliances covering the sub-region, acting not merely through governments but establishing transborder popular movements and power to build peace.

D. Asian Peace Alliance has a strategic importance in the above sense and besides it has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against the US Iraq war, US axis of evil calling, support Korean people's cause, etc., but basically it purports to build peace in the Asian societies where people, particularly women, are being victimized by conflicts, patriarchal violence, etc. APA addresses these issues to create people's security. We need grassroots alliances calling for demilitarization at all levels, including culture and education.

E. The nexus between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US war of global pacification; the necessity of anti-globalization movement and peace movement coming together, which is already being realized in WSF and ASF.

F. National basis and global perspective. Most Asian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have been formed within their respective national (or nationalist) frameworks. (for example, peace constitution frame for Japan, national unification for Korea, national democracy for the Philippines). They react to the global or regional issues from national perspectives, and this is necessary as it shows it is rooted in history. But that is not enough as the whole (e.g. US global strategy) is often cut up into separate national vistas so cannot be shown in its full view. It is necessary that we, while staying rooted, go beyond the national frameworks and see the whole by linking up with other people. This is exactly what APA is up to. This is a process that should be engendered.

G. Last, a very specific suggestion. A proposal can go to APA to support the formation of a joint anti-US presence movements among South Korea, Japan, Okinawa, and the Philippines. We have similar problems but do not yet have our strategic alliance. Acting together through such alliance would build up another pressure on the US and US-supporting governments, and at once would certainly help broaden our perspectives.



한국의 반전운동과 국제연대

김광일 (다함께 반전활동가)

한국의 반미 정서는 매우 광범위하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RC)가 발표한 '2002세계인의 생각' 보고서를 보면 비이슬람권 국가 가운데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나라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였다. PRC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72퍼센트가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했다. 73퍼센트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방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반미 정서는 지난해 말에 대규모 촛불 시위로 폭발했다. 12월 7일, 14일, 31일 촛불 시위는 한국 반미·반전 운동의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12월 14일 시위는 한국 반미 투쟁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 14일에는 서울에서만 5-6만 명이 참가했다. 전국적으로 대략 3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대의 구성도 매우 다양했다. 지배자들이 "반미"를 "용공"으로 밀어 붙여 왔던 한국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반미 시위에 가담했다. 시위대들은 두 여중생을 장갑차로 깔아 뭉개 죽인 미군에 대한 무죄 평결에 항의했다. 뿐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기도 했다. 12월 7일 시위에서 촛불 시위 최초 제안자는 "세계 시민인 우리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이라크에서 효순이, 미선이 같은 아이들이 1백만 명씩 죽어가는 것을 슬퍼해야 한다"고 말해 커다란 박수를 받았다. 12월 14일 집회에서는 월든 벨로와 유명한 가수가 이라크 전쟁 반대 주장을 펴 참가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2001년 9·11 공격 이후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미·반전 운동에 한국도 가세했다.

반미 정서의 근원

대규모 촛불 시위로 표현되는 한국 반미 운동의 폭발적 분출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한국의 반미 운동은 종종 주한미군을 반대하는 형태를 취한다. 역사적으로 특수한 이 나라의 조건, 특히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이 강요한 분단과 전쟁 경험 때문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오만하게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미국은 서울에서 공공연히 자신들의 정치적 비중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시내 중

심가의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한 거대한 부지에 머물고 있어 한국인들을 자극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러 유럽인들도 미국인들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 한국을 '미국의 나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프랑크푸르트 알레마이네 자이퉁> 2002년 12월 3일치.)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대북 강경 물이는 대중이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포함시킨 데다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악의 축' 국가들에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는 태세다. "미국의 고압적이고 둔감하며, 특히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서 그렇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미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뉴욕 타임스> 2002년 12월 8일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IMF 경제 공황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를 경험했다. 대중의 삶을 망가뜨리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세계화를 미국이 강요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렇듯 촛불 시위 이면에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대중적 자각과 반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미국의 패권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토양이기도 하다.

한국의 반미·반전 운동

2001년 9·11 공격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9·11 공격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 낳은 쓰디쓴 결과였다.

1991년 제2차 걸프 전쟁 때와는 달리, 9·11 공격을 계기로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전에는 미국과 서방의 시각으로 이슬람을 바라보던 시각이 유력했다. 그러나 서방 제국주의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슬람을 재조명하는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 노엄 촘스키나 하워드 진 같은 저명한 반전 활동가들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올랐다.

9·11 공격 직후에 "테러 반대·전쟁 반대"라는 태도를 취한 단체들도 더러 있었으나, 대부분의 단체들은 반전 운동을 건설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앞두고 반전 운동을 공동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700여개 단체가 참가하는 반전 연대 기구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이하 '공동실천')이 만들어졌다.

노동조합, 환경 단체, 여성 단체, 좌파 정당, 종교 단체, 사회 단체, 학생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실천'에 참가했다. 그 해 12월 15일 '공동실천'은 1천여 명 규모의 반전 집회가 열렸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이 후원하는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부시는 2002년 1월에 "전쟁의 해"를 선포했다. 그리고 이라크·북한·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해 2월 부시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벌어졌다. 학생 운동

가들은 미상공회회의소를 점거했다. <시사저널>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1퍼센트가 점거를 지지했다. 2월 15일 부시 방한 반대 시위에는 4천여 명이 참가했다.

수면 아래에서 들끓던 반미 감정이 6월 두 여중생의 압사 사건을 계기로 다시 터져 나왔다. 10월 초쯤에는 두 여중생 압사 사건 항의 운동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와 결합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0월 초 4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항의 집회에서 이라크 전쟁 반대 주장이 나왔다. TV 뉴스는 이 집회가 전국적 규모라는 점과 이라크 전쟁 반대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항의 운동은 미군 법정이 가해 미군 병사들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폭발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항의 운동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전쟁 계획에 반대하는 운동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전 운동은 이미 국제적 규모로 성장하고 있었다. 2002년 9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40만 반전 시위는 전 세계 반전 활동가들을 고무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0월 26 첫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가 열렸다.

반전 운동 건설을 향해

지금 미국은 1990년대 이후 네번째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1991년 제2차 걸프전과 1999년 세르비아 전쟁,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9·11 이후 부시 정부는 한층 공격적인 세계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작년 1월 29일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 우리의 두 번째 목적은 테러 지원국들이 미국과 우리의 우방과 동맹국을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라크·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그 해 6월 부시는 "악의 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밝혔다. 이른바 "선제 공격 독트린"이다. "우리는 비확산 협정에 서명한 뒤 그것을 체계적으로 어기는 독재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 테러와의 전쟁은 방어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적과 전투를 택해야 하고, 적의 계획을 가로막아야 하며, 최악의 위협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과 대결해야 한다. 우리가 들어선 세계에서, 안정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은 공격하는 길이다."

선제 공격의 첫 대상은 이라크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석유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기업은 산업을 점점 더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독일·일본 등 다른 강대국들의 석유 공급이 미국의 군사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들은 미국보다 더 수입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열강들이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시킴으로써 미국은 자신의 세계 패권을 천명하려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불량 국가"들이 아니라 장차 자신들과 대적할지도 모를 잠재적 경쟁국들이다. 부시 정부는 지금이 잠재적 경쟁국들을 단속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막강한 군사력과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어떻게든 이라크를 침공하려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 불안정은 부시가 미치광이이러서가 아니라 미국 공화당내 우익들의 세계 패권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세계 질서를 더한층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 상황은 불안정의 또 다른 사례다.

한국의 반전 활동가들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미국이 일으키려는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이를테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미국의 패권 정책도 문제고 탈레반의 억압 통치도 문제라는 식의 접근은 반전 운동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다. 탈레반의 억압 통치를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제국주의 위협과 탈레반의 억압 통치를 공평무사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와 굶주리는 어린이에 관심이 없다. 미국은 자국의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아시아·아프리카·남미에서 가난과 기아와 질병을 강요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독재자들을 지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영국·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반전 운동을 놓고 보면, 좀더 분명해질 수 있다. 9·11 공격 직후 영국·이탈리아의 반전 운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에 선명하게 반대했다. 반면, 프랑스 활동가들은 미국과 이슬람 모두에 반대했다('야만의 충돌'). 이런 태도 차이는 반전 시위 규모의 차이를 낳았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거대한 반전 운동을 건설했지만, 반자본주의 운동이 강력했던 프랑스에서는 반전 운동이 지지부진했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군사적 위협에 반대하는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그들은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더욱 거만해져 '효순이 미선이'에게 저지른 일을 언제든 반복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 민중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반전 활동가들은 전 세계 민중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디딤돌을 쌓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의 집을 짓는 것은 거대한 대중 행동이다. 우리는 대규모 반전 운동을 건설하려는 이유다.



한국평화운동의 국제연대 현황과 과제

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갈등예결센터)

평화운동은 필요한 정치적 변화를 지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획득하는 데 있다.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1. 머리글

국제적으로 미국의 이라크전쟁이 앞에 있고, 한반도에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대립이 악화일로에 있다. 경제적 세계화와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한 정보의 세계화 속에서 영미의 이라크전쟁은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있다. 북미의 대립은 한반도 뿐 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9.11참사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반전평화운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정부와 군국주의세력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제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세력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반전평화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2년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에 10만명이 참가하는 등 전쟁반대와 평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은 크다.

미국의 힘에 의한 일방주의를 반대하며, 군사주의 척결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현시점에서 이라크전 반대운동과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및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 한국평화운동이 국제연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1) 한국평화운동의 국제연대에서 요구되는 관점

-한국평화운동의 국제화, 국제평화운동의 국내화

한국평화운동의 국제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이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평화운동의 국내화는 세계화시대에 외국에서 일어나는 갈등, 분쟁이

한반도 평화형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뛰어넘어 국제적인 열린 시각과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측면에서 평화운동은 민족적 시각과 국제적 시각을 가져야하며 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2)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에 어떤 내용/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현재 한국평화운동의 현황, 시위 등을 소개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평화운동을 분석적으로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운동의 동향과 흐름을 국내에 소개해야 한다.

3) 전문성

언어능력, 국제 감각 등 국제연대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재 평화단체가 적고 평화단체에서 국제연대를 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제연대활동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연대를 위한 인적 풀(pool) 형성이 시급하다.

4) 지속성

이슈 (burning issue) 중심의 연대와 함께 조직적인 연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대가 중요하다. 그동안 국제회의 조직 및 이슈별 연대에 집중해 지속적인 국제연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9.11 이후 조직적 연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연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국제시민사회에서 신뢰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

**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현실적인 질문)

누가 국제연대를 할 것인가: 어떤 조직이 할 것인가, 국제연대 담당자, 국제연대담당자가 없다면...

언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 사안이 지난 후 연대하면 늦다.

어디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세계 곳곳에서...

무엇을 알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메일을 통해, 잡지를 통해, 국제회의를 통해, 대표단을 파견해..

왜: 목표를 분명히 하라. 효과적으로 평화이슈를 알리기 위해

3. 한국평화운동의 국제연대 현황

1) 시기별 연대

○ 9.11참사이전

- 평화단체의 국제연대는 몇몇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사회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성명서를 번역해서 알리는 수준이었다.

예: 1999년 5월 헤이그세계평화대회 참석

- 해외 평화단체와 사안별 연대

예: 5.24 세계여성 군축의 날 행사-평화여성회와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과 연대

○ 9.11이후

- 9.11 직후 2001년 10월 9일 한국 319개 단체, 일본 28개 단체 공동주최로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반대, 일본 군국주의 반대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소수 평화활동가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제연대활동이 없었다.

- 한국 평화운동에 대한 해외소개나 해외 반전평화활동에 대한 국내소개는 상당히 미흡했다.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 등 국제적 반전평화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개최한 반전행동 소식 이외에 다른 한국의 움직임이 올라와 있지 않았다.

- 2002년 아시아평화연대 결성 (Asian Peace Alliance)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푸에르토리코·미국 여성네트워크(East Asia-Puertorico-the US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와 연대, 세계사회포럼이후 노동계를 비롯한 민중단체들의 반전운동에 대한 국제연대로 국제연대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 아시아평화연대의 결성과 활동은 한국평화단체들이 아시아의 평화단체들과 공동으로 반전평화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적 연대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푸에르토리코·미국여성네트워크와 연대는 여성이 평화문화 확산과 반전운동의 주역세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사안별 연대

○ 9.11 참사이후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반대

국내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평화단체에 배포-WILPF, IPB, AFSC 등 단체에서 이 성명서를 배포

○ 여중생 압사사건 - 아시아평화연대의 대표단 파견(2002년 12월 14일 100만 촛불

대행진 참가)

○ 이라크전 반대

- 아시아평화연대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푸에르토리코·미국여성네트워크의 결정에 따라 한국 평화단체와 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10.8 국제반전행동-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년을 기억하며, 이라크 공격을 반대한다.” (2002.10.8) 조직.
- International ANSWER의 요구를 수용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10.26 국제반전행동”(2002.10.26) 조직.
- 세계사회포럼의 결정에 따라 “이라크공격 반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2.15 국제공동반전평화대행진”(2003.2.15) 조직
- 광야의 목소리(Voices in the Wilderness)와 연대해 한국 이라크평화팀 (Iraq Peace Team of Korea) 파견

3) 주제별 연대

군사주의 반대

미사일방어 반대

갈등해결

전쟁반대

(현재 전쟁반대는 가부장제 반대와 세계화반대라는 주제와 연동되어 진행되기도 한다.)

4) 국제회의를 통한 한국평화운동의 확장

- 아셈간담포럼 (ASEM People's Forum & ASEM4People)-'2000,10/ '2002
- 아시아평화연대 (Asian Peace Alliance)창립대회 2002.8
- 지속가능한 발전 정상회의 (WSSD)와 민중포럼 (Global People's Forum) 2002.8
- 아시아시민사회포럼 (Asian Civil Society Forum) 2002.12
- 아시아사회포럼 (Asian Social Forum) 2003.1
-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2003.1

5) 국제평화네트워크를 통한 연대

○ 아시아평화연대

2002년 9월 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지역 17개국 대표들이 참가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며 아시아 공동의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세계화와 가부장제를 반대하는 활동

을 펼치고 있다.

○ International A.N.S.W.E.R(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

ANSWER은 전 미국 법무장관인 램지 클라크와 소수민족지원그룹, 경제정의그룹 등 진보그룹이 2000년 9월 29일을 ‘전쟁반대 국제행동의 날’(International Day of Protest Against The War)을 제안하며 조직한 단체로 전쟁반대, 인종주의 반대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의 연합체이다. 9월 29일 집회는 10,000명이 참석했고 9월 29일 집회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전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http://www.internationalanswer.org>

○ Nonviolent Peaceforce

분쟁지역에 비폭력평화세력을 보내 분쟁예방 활동을 하는 국제단체로서 2002.12월 창립.

○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푸에르토리코·미국 여성네트워크(East Asia-Puertorico-the US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6) 외국 평화단체와 연대

7) 연대방식

성명서 번역 배포, 반전공동행동 조직, 연대사 교환, 지원단 파견 등 점차 연대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연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조직적 연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아시아지역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시아지역의 연대 뿐 만 아니라 미국 평화단체와 연대도 시급하다.

4. 평화운동 확산을 위한 국내연대와 국제연대의 결합

국제연대를 위한 평화단체 네트워크-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
국제평화운동, 국제회의 정보 공유, 국제회의 참가자 추천, 국내 평화단체의 요구를 국제 평화단체에 전달 등

5. 북한핵 위기이후 국제연대

2월 5일 뉴욕타임즈 사설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 주변 군비증강은 첫째, 미국의 두 개의 전쟁 가능성을 나타내며, 둘째,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한다.

북한핵문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연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한국평화운동이 국제시민사회에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얼마나 알리고 지원을 확보해 왔는가? 둘째, 현시점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국제평화세력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제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점은 여중생 압사이후 아시아평화연대가 직접 연대 대표단을 파견한 것처럼 대중운동의 활성화이다. 다수 대중의 촛불시위 참가는 아시아지역 평화활동가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으며 대표단 파견이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북핵관련 국제연대의 어려움

핵문제의 민감성

국제사회 평화·안보문제, 핵문제의 처리-정부의 독점 (IAEA, UN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내 시민사회의 핵문제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한국평화운동의 국제연대 한계

2) 카터와 국제평화단체에게 편지 보내기

3)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

○미국 평화단체 및 국제평화단체와 연대

미국친우봉사회(AFSC), 평화와 정의 연대(United for Peace and Justice), International ANSWER, 전쟁중지연맹(Stop the War Coalition), 아시아평화연대 등

○미국내 여론주도층과 대화

○미의회의원과 연대

참고: 하스팅스의원의 결의안 제출

2003년 1월 28일 "Calling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return to an interim level of compliance with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while a more comprehensive and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can be negotiated by those two nations" 제출

5. 한국평화운동의 국제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 국제연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평화운동의 주제별 분화와 국제연대의 전문화

3) 이라크전쟁 반대와 북한핵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의 효율적 배치 필요



사회변혁을 위한 비폭력의 실천에 관하여

박성준 움직이는 학교대표, 성공회대 겸임교수

최근 미국의 친구들이 [비폭력]에 관한 한 편의 글을 내게 보내주었다. '치유하는 칼'(The Sword that Heals)이라는 상징적인 제목이 붙은 이 글은 세계를 변혁하는 평화로운 수단과 전략에 대해 매우 설득력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저자 [조오지 레이키](George Lakey)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사회변혁을 위한 훈련 센터](Training for Change)의 소장이며 사회운동과 평화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헌신적인 활동가이다. 올해 66세인 그는 일찍이 [사회변화를 위한 마틴 루터 킹 학교]의 교사로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 비폭력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룹들과 단체들과 협력해 왔다. 운동의 방법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촌 5개 대륙을 누비고 다니며 사회변화를 위한 각종 워크숍 등을 지도하기를 무려 1,000회 이상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의 대표적 저서인 [힘있는 평화 만들기][Powerful Peacemaking]의 부제 '살아있는 혁명을 위한 전략(A Strategy for a Living Revolution)'이라는 부제가 우리들의 입맛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자신의 평화주의적 입장을 안이한 비폭력주의와 구분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동의한다.

- 이 세계는 불의와 착취가 만연하고 있고 상처 입은 지구는 마지막 단말마의 신음을 토하고 있다.
-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피라미트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에 대해서도, 범죄적 살인을 일삼는 미합중국에 대해서도 아무런 환상을 갖지 않는다.
- 세계도처에서 군사적 개입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미제국(the U.S. Empire)은 오늘 지구촌 제1의 강패(killer)다.
- 폭력과 비폭력을 유효 적절히 배합하는 전술 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무장투쟁(armed struggle)에 대한 고려를 교조적으로(dogmatically) 배제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경직된 사고는 '전략의 창조'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그는 투쟁에 대하여 사고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실용주의적으로(pragmatically)] 사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고통을 줄이고 정의를 증대시키며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장악하려면 어떤 수단이 가장 유효적절한가? 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폭력 혁명'과 '비폭력 혁명'은 실제로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어느 쪽도 미국 혁명을 위한 비장의 해법이라곤 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장투쟁 지지자들과 비폭력 투쟁 지지자들 사이에서 철두철미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를 하는 것이다."

그는 비폭력적 행동과 피동성(passivity) 사이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1930년대에 불의한 상황에서의 피동성을 볼 때 마다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비폭력적 저항이 피동성과 대체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를 잊지 않았던 간디를 회상한다.

"사실, 간디는 어쩌나 피동성을 싫어하고 반대했던지 다음과 같이 충고할 정도였다. '만일 악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법이 오직 피동적 방편 아니면 폭력적 행동 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폭력을 선택해야 한다.' 고 말했다.' 실생활 속에서는 언제나 두개 이상의 선택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효과적인 비폭력적 행동을 창조해 내야 한다."

그는 비폭력이 결코 나약하고 무력한 수단이 아니며 충분히 정부의 폭력과 맞겨루어 승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여러 역사적 사례를 들어 역설한다.

"정부는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비폭력이라도 짓부수어 버릴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비폭력적 행동에 의해 전복된 군사 독재정권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세르비아의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소비치는 2000년에 압도적인 군사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가 비폭력 운동에 의해 맥없이 부너져 버렸다. 1986년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도 그랬다. 동독이 그랬고 헝가리와 체코가 그랬고 1989년에는 폴란드의 독재 정권이 뒤를 따랐다. 이란의 샤는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꼽히는 가장 강력한 군대와 그 잔인성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비밀경찰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1977~79년 사이에 비폭력의 방법에 의해 무너졌다. 이렇게 예를 들어가자면 한참 이어질 것이다.

워드 처칠 교수의 주장 가운데 가장 사회운동가들이 보기에 어이없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인민대중의 힘(People power)을 과소평가하는 점이다. 실은 그 '피플 파워'야 말로 우리들이 근거해야 할 주된 힘(the main power)인데 말이다.

풀뿌리 운동가들이 정부의 돈을 당해낼 재간은 없다. 또 우리가 정부의 폭력과 겨뤄 볼 수도 없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은 '피플 파워' 뿐이다. 그 힘을 알잡아 보는 것은 절망을 자초하는 길이다.

폭력이야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이라는 가설은 대부분의 우익들과 좌익들, 그리고 중관계층마저가 공유하고 있는 인습적 지혜다. 그것은 한 때 널리 받아들여졌던 지구가 납작하다는 옛 주장 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풀뿌리 운동가들은 구체적 실천과 사례를 통해서 폭력의 무력함을 자주 경험하곤 한다. 그 한 고전적 예는 1944년 한 무장봉기가 독재자 헤르만데스 마티네를 타도하는 데 실패했던 엘살바도르의 경우다. 정부는 무장투쟁을 격퇴할 만큼 충분히 강했다. 그 때 학생들이 나서서 비폭력 봉기를 주도했다. 그들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마티네를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 피플 파워가 폭력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웃 나라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로부터 하도 감명을 받은 나머지, 카리비아 해의 철의 독재자 조르게 우비코에 대항하는 비폭력 봉기를 일으켜 성공을 거뒀다.

오늘날, 제3세계에서는 과거 무장투쟁노선을 견뎌온 해방운동들이 무장에 의한 방법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돌아섰다. 치아과의 자파티스타들은 바로 이런 현상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례다. 1980년대 초에 아프리카 국민회의(Africa National Congress)는 자신의 무장투쟁이 실패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흑백분리주의를 격파하기에는 턱없이 무력했다. 그것은 심지어 자유를 위해 행동할 열의를 가지고 있던 도시의 시민 대중들을 영입하는 데도 실패했다. 그래서 국민회의는 비폭력 투쟁에 뛰어들었다. 그 방법은 스트라이크, 보이콧, 다양한 종류의 시위 등이었다. 테러 조직에 버금가는 경찰력으로 잘 무장된 국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분리주의의 종언(終焉)이었다.

운동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만큼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 pragmatic)일 때, 폭력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 '재산 파괴'(property destruction)에서도 손을 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폴랜드의 연대 노조운동은 크게 보아 공산당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청년 운동이었다. 운동의 초기에 그들은 파업과 점거농성에 약간의 재산파괴를 곁들이곤 했다. 운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그들은 재산파괴가 독재자에게 강경진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과 자기편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사람들을 놓쳐버려 동맹세력의 수를 격감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파괴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운동의 외연을 차츰 넓혀 승리를 향해 나아갔다. 물론 군국주의 정부는 그들을 분쇄하려 들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피플 파워'가 '밀리터리 파워'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사회란 집과 같은데, 그 집의 기초는 대중의 지지와 동의로서 이루어진다. 지붕은 국가와 그 억압적 기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기초가 사라지면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느냐고 묻는다. "지붕 위에는 탱크와 중무기 등을 잔뜩 쌓아놓는다고 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태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기초가 없어질 때 그 집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집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란의 샤(the Shah of Iran) 정권에게 일어났었다. 국왕 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와 무자비한 비밀경찰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미국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다. 이에 대항하는 민주화 세력은 완전히 '비폭력 전략'을 채택했고 그것이 주효했다. 샤의 집의 기초는 국민들의 동의였다. 그 기초가 무너지자 집은 폭삭 내려앉아버렸다.

정치적 지배(political rule)의 기초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이지 폭력이 아니라는 것, 오늘 날 사회운동가들이 알아야 할 사항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피플 파워는 그 어떤 폭력 보다 더 힘이 세다. 우리들이 한시바빠 이런 지식 위에서 행동한다면 미 제국(the U.S. Empire)의 붕괴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묻는다. 비폭력 혁명”(Nonviolent Revolution) 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사회변혁은 용어 그 자체가 모순인가?

많은 사회운동가들은 '혁명적'이면서 동시에 '비폭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 반대한다. 또는 비폭력은 본질적으로 개량주의적이고, 반면에 혁명은 폭력을 뜻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것은 일반적 사회 통념과 일치하는 생각이긴 하다. '혁명' 하면 대뜸 '폭력'을 연상할 만큼 우리는 그러한 통념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생각이 옳은가? '폭력 혁명' 아닌 '혁명'은 없는가?

1968년 봄 프랑스에서는 정부를 거의 쓰러뜨릴 정도의 거대한 대중의 혁명적 봉기가 일어났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것은 '비폭력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 사례로서 연구하고 교훈을 얻기에 적절하다.

5월에 빠리의 대학생들은 교육개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대학 캠퍼스를 점거하고 거리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잔인하게 대응했다. 학생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문이 재빨리 퍼져갔다. 프랑스 노동조합은 학생들에 동조하여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순식간에 8백만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고 그 중 많은 조합들은 작업장을 점거했다. 점거는 당시 흔히 사용되던 전술이었다.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들은 대자동차 공장을, 묘지 노동자들은 공동묘지를, 무희들은 '폴리 베르케르' 국립무용소를 점거하는 그런 식이었다.

투쟁은 깊어갔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내건 구호는 개혁에서부터 혁명까지 다양했다. 어떤 도시에서는 중앙정부와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 자신의 화폐를 인쇄했다.

드골 대통령은 당시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의 장군들이 병력을 이끌고 프랑스로 귀환해 사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하며 그들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내몰렸다. 왜냐하면 그는 프랑스 국내의 군대가 혁명에 가담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프랑스 사회 양극화의 이쪽 편에 있었고 부유층은 그들의 반대쪽에 있었다. 문제는 중간층의 향배였다. 그들이 어느 쪽으로 선회할 것인가? 그들 중 다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었고 친지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경찰의 잔인성에 분노하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우호적이었다.

국영 TV는 학생들의 '재산파괴'(property destruction) 장면을 되풀이 또 되풀이 해서 방영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주거지의 자동차를 거리로 끌고가 불을 지르고 그 잔해로 바리

케이드를 쌓는 장면 같은 것을 계속 내보냈다. '강력한 메시지'가 자산계급인 중간층들에게 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전달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간층들이 직면한 허망함은 학생들의 시위에서 어떤 대안이나 비전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가령 국가가 전복된다 치자. 그 다음에 올 사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새 사회 안에 자신들의 자리는 있는 것인가? 아무도 이 물음에 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혁명진영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선언이나 강령 조차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간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려움을 품은 채 앉아서 TV의 화염을 바라보고 있는 것 뿐이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다. 학생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몇가지 개혁이 이뤄지긴했지만, 국가와 대기업은 승리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왜 학생들은 승리에 필수적인 그들의 동맹세력을 멀리 쫓아버린 것일까?

가장 크고 절실한 실패의 요인으로는, 첫째로 학생들이 "혁명=폭력"이라는 기존의 전통과 도식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혁명을 원했고 그래서 혁명과 폭력을 한 묶음으로 (as a package)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들은 혁명의 수단과 방법에 관한 기술혁신(innovation)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로, 학생들은 프랑스의 '집'(=정치사회의 질서)의 기초는 대중의 동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했다. 만일 그들이 대중의 비폭력적 비협력(people's nonviolent noncooperation)을 얻어내는 전술을 고조시켰더라면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1968년의 그들은 이란의 샤의 몰락이나 필리핀의 마르코스의 예나 동유럽의 독재정권들의 붕괴 사례 등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무장 투쟁 보다 더 강력한 것이 '피플 파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부 문 토 론

2002년 대선 이후의
주요 개혁 및 사회운동 의제

이천삼년 이월칠일 오후 일곱시부터 열시까지

1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 교육, 의료,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	박한중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발제	강영호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치위원, 성수중
토론	우석균	인의협 정책실장
	김경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실장

2	언론개혁과 안티조선운동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	신태섭	민연련 정책위원, 동의대 신문방송학
발제	김동민	조선일보빈대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일장신대
	김서중	민교협 정책위원장,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토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노예경	시인
	김유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기획부장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

강영호 울산의대예방의학교실

1. 서론

○ 불평등(inequality)은 '같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며, 차이(difference), 부등(不等, disparity)임. 비형평성(inequity)은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는데, 불평등 현상이 정의(justice)에 입각할 때 공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대한 평가(fairness)가 뒷받침되어야 함.

○ 한 예로, Whitehead (1992)는 건강수준에서의 차이 중에서 회피가능한 건강문제이면서 그 차이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음.¹⁾ 그런데, 회피가능성이나 공정성의 가치 판단은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 따라 다르게 마련임. 일부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강수준의 불평등 지표와 이에 대한 가치판단(또는 태도)의 지표를 결합하여, 건강수준의 형평성을 평가하기도 하지만,²⁾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는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이 점에서 건강수준에 대한 형평성 보다는 불평등(inequality) 여부를 다루는 연구가 현실적으로 많음. 하지만, 불평등 역시, '형평하지 않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로는 이 둘 간의 의미 구분이 그리 엄격하다고 할 수는 없음.

2.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 현황

2.1. 우리 나라의 건강 불평등 측정 활동

○ 메스컴이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화(逸話)적인 사례를 제외할 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건강 불평등 연구는 드물.

1) Whitehead M.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Int J Health Serv 1992;22(3):429-445.

2) Wagstaff A. Inequality aversion, health inequities and health achievement. J Health Economics 2002;21:627-641.

3

문화교육운동과 시민사회운동과의 관계

문화계역을위한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회: 지금중 문화연대 사무처장
 발제: 심광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토론: 정재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손지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실장
 서형원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

4

환경, 사회연대, 생태사회 : 환경운동의 전략과 비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사회: 김광식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
 발제: 안면희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연구소장, 서강대 연구교수
 토론: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미영 여성환경연대
 이상헌 녹색미래
 남상민 녹색연합 정책위원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한반도 위기 해법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사회: 신승철 민주노동부 위원장
 발제: 정대연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토론: 김인식 다함께 번전활동기
 유영재 지통협 사무국장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
 김종일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 건강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증감을 모니터하는 것은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도록 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인 연구활동임.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강 불평등 해소 노력의 이면에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측정 활동이 전제되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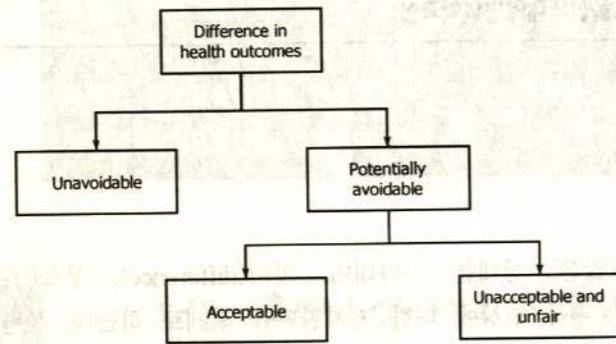


Figure 1. Judgement criteria for health inequality and health inequity (Whitehead, 1992)

○ 한편, 건강 불평등의 측정 활동은 정부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영국의 경우, 이미 19세기 말부터 국가 생정통계(vital statistics)를 관장하는 Registrar of General이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사회계층을 분류하고, 이를 분모로 하는 사회계층별 사망률을 발표하여 왔음.³⁾ 우리 나라의 경우, 10년 간격으로 센서스를 실시하는 주요 외국과 달리 5년마다 센서스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982년 이후 모든 사망이 사망통계로 수집되고 있으며, 두 가지의 통계(센서스와 사망통계)에서 모두 교육 수준과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를 얻을 수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상태별 사망률은 계산되지 않고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단순히 직업별(대분류별), 교육 수준별 사망자수(분자)만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센서스 자료에서의 직업 및 교육 수준별 인구수 자료(분모)와 연계하여 발표하려는 노력을 해오지 않고 있음. 직업의 경우, 우리 나라 사망 자료에 대분류 자료만이 공개되어 있어, 세부 직업구분을 이용한 사회계층별 사망률을 계산할 수 없음.

○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들에서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들이 측정되어 사용되고는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임상적 문제에 대한 교란변수로 사용될 따름이지, 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주 관심 변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에 대한 보고가 활발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임. 우선은 불평등 연구 또는 보고가 뿌리내리기 힘들었던 이념적 환

3) Macintyre S. The Black Report and beyond: what are the issue? Soc Sci Med 1997;44:723-745.

경과 관련 있을 것임. 주지하듯이,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매우 강력한 반공국가로서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기존 정권에 대한 큰 도전이었음. 물론, 유럽의 경우에도 일부 국가에서 이념적 환경이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측정에 장애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⁴⁾ 우리 나라의 이념적 환경보다는 우호적일 것임. 1930년대에는 존재하였던 건강 불평등에 대한 정부 차원(건강 관련 자료 담당 부서)의 측정 활동 전통이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이 시작되면서 사라졌던 미국의 상황⁵⁾을 고려할 때,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던 1950년대의 우리 나라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임. 이후 노동운동의 미성숙이 이 분야 연구에 대한 정치적 뒷받침을 어렵게 하였을 것임.

○ 건강 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데에는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 상황도 기여하였을 것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결정되어 왔던 우리 나라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접근성에 비하여 건강수준의 불평등 연구에 대한 연구가 부차적인 과제로 여겨져 왔던 측면이 있음. 1989년에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등 이전까지는 전국민에 대한 기초적인 의료보장마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가 보건의료 부문의 가장 큰 과제로 여겨졌음.

2.2. 우리 나라의 건강 불평등 현황

○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도 개별 연구자의 수준에서 건강 불평등을 보고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음. 물론 최근의 몇몇 연구를 제외할 때, 건강 불평등 연구는 우리 나라의 출산력 또는 사망률 보고 내용 중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임.

○ 우리 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김태현(1990)은 남녀 성인에서의 사회계층별 사망률 차이를 보고한 바 있음.⁶⁾ 물론, 성인에서 사회계층별 사망률 차이를 보고한 연구 자료는 1960년~1980년의 사망자료로서 사망자료의 완전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수준과 직업별 사망률 차이를 남녀별, 연령별로 자세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처럼 우리 나라 센서스 자료와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계층별 사망률을 파악한 연구로는 최근의 손미아 등(2002)의 보고,⁷⁾ 강영호 등의 보고⁸⁾가 있음.

4) Aiach P, Carr-Hill R. Inequalities in health: the country debate. In: Fox J. (ed.) Health Inequalities in European Countries. Aldershot; Gower, 1989. pp.19-49.

5) Krieger N, Fee E. Measuring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in the United States: a historical review, 1900-1950. Int J Health Serv 1996;26(3):391-418.

6) Kim TH.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990.

7) Son M, Armstrong B, Choi JM, Yoon TY. Relation of occupational class and education with mortality in Korea.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2; 56: 798-799.

Table 1. Mortality ratios by educational level, 10-year age group (25-64 years) and sex, Korea 1970-1972 and 1979-1981.

Age and educational level	Males		Females	
	1970-1972	1979-1981	1970-1972	1979-1981
25-34 Years	1.00	1.00	1.00	1.00
None	3.41	8.51	2.20	8.55
Primary school	1.58	2.30	1.12	1.49
Junior & Senior high	0.58	0.63	0.44	0.46
College & higher	0.35	0.32	0.29	0.38
35-44 Years	1.00	1.00	1.00	1.00
None	1.53	3.35	1.15	2.41
Primary school	2.38	1.77	1.09	1.07
Junior & Senior high	0.60	0.58	0.50	0.51
College & higher	0.36	0.30	0.37	0.33
45-54 Years	1.00	1.00	1.00	1.00
None	0.96	1.47	0.95	1.17
Primary school	1.32	1.34	1.19	1.02
Junior & Senior high	0.65	0.65	0.66	0.62
College & higher	0.41	0.39	0.52	0.55
55-64 Years	1.00	1.00	1.00	1.00
None	0.84	0.92	0.89	0.91
Primary school	1.54	1.29	1.70	1.27
Junior & Senior high	0.69	0.74	1.02	0.88
College & higher	0.45	0.50	0.46	0.78

* Source: Kim TH.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990. p65.

○ 영유아, 소아에서의 사회계층별(부모의 사회계층) 사망률도 보고되어 왔는데, 1974년도 출산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박재영 등(1980),⁹⁾ 권태환(1986),¹⁰⁾ 김태현(1990) 등의 연구가 있음.

8) Khang YH, Lynch J, Kaplan GA.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Age- and Sex-specific Educational Differences in Risks in the 10 Leading Causes of Death. 2003. (mimeo)

9) 박재영, 김모임, 공정자, 양재모. 한국출산력조사특별분석시리즈.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1980.

10) Kwon TH. The Trends and Patterns of Mortality and Health in the Republic of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76. Bangkok;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86.

Table 2. Child,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by socioeconomic variables for 1956-1970 birth cohort.

	Child (0-4)	Infant (0)	Childhood (1-4)		Child (0-4)	Infant (0)	Childhood (1-4)
Mother's education				Father's education			
Primary -	8.54	5.61	3.10	Primary -	9.24	5.81	3.64
Secondary +	4.95	3.83	1.17	Secondary +	6.43	4.71	1.80
Mother's occupation, before marriage				Father's current occupation			
Not worked	7.76	5.26	2.64	White collar	6.01	4.57	1.51
Non-manual	6.47	5.20	1.34	Service/sales	6.76	5.02	1.83
Farmer	8.38	5.33	3.22	Farmer	9.44	6.09	3.57
Labourer	7.86	5.20	2.81	Labourer	6.93	4.52	2.52

* Source: Kwon TH. The Trends and Patterns of Mortality and Health in the Republic of Korea. Bangkok;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86. p25.

○ 사망률이 아닌 다른 건강 지표상에 있어서도 건강 불평등 현상은 관찰되고 있음. 1999년도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할 때, 가구원수 보정후 소득 10분위에 따른 자기 평가 건강 수준을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 평가 건강 상태를 '건강하지 못하'거나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Table 3. Morbidity by income* decile for males and females aged 15 or over: age-adjusted odds ratios for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unpublished data)

Income decile	Males aged 15 or over			Females aged 15 or over		
	No. of subject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	Odds ratio (95% CI)	No. of subject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	Odds ratio (95% CI)
Lowest decile	2,790	32.0	4.07 (3.49-4.75)	3,632	46.3	2.23 (1.98-2.51)
9th	3,180	19.5	2.99 (2.55-3.49)	4,166	28.2	1.94 (1.72-2.18)
8th	3,838	19.4	2.18 (1.87-2.54)	2,631	34.5	1.63 (1.43-1.85)
7th	3,149	10.3	1.61 (1.35-1.91)	5,276	21.4	1.42 (1.27-1.60)
6th	2,731	15.2	1.98 (1.68-2.34)	2,468	25.1	1.58 (1.38-1.81)
5th	5,167	11.9	1.55 (1.33-1.80)	3,410	25.8	1.38 (1.22-1.57)
4th	2,111	12.3	1.52 (1.26-1.82)	4,504	19.5	1.27 (1.12-1.43)
3rd	3,918	9.4	1.27 (1.07-1.50)	2,562	21.9	1.21 (1.06-1.39)
2nd	2,486	9.6	1.23 (1.02-1.48)	4,417	18.0	1.15 (1.01-1.29)
Highest decile	3,245	8.5	1.0	3,355	18.5	1.0

* Individual income = (household income) ÷ (household size)0.36

건강 불평등의 추이

○ 건강 불평등의 문제는 “유무(有無) 여부의 판단” 문제를 뛰어 넘을 때, 더 큰 사회정책적 함의를 갖게 됨. 한편에서는 건강 불평등의 발생경로(기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건강 불평등 수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후자의 건강 불평등 수준의 모니터링은 건강 불평등 연구의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도 함.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여 왔고, 어떤 경우 회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것보다는 “불평등 정도가 증가(또는 감소)한다”는 것이 더 큰 사회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때문임.

○ 외국의 경우 건강 불평등의 추이를 보고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보고가 전무한 실정임. 우리나라의 1990년도, 1995년도, 2000년도 센서스 자료와 센서스 기준 날짜(11월 1일) 후 1년 동안의 사망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에서의 건강 불평등 수준을 상대불평등지표(relative index of inequality)11)로 평가하면,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1990년도에 비해 2000년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 확률의 불평등은 증가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이는 여성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판단됨.(Table 4 참조)

Table 4. Changes in sex-specific age-adjusted educational mortality rate ratio and relative index of inequality using Korean 1990, 1995, 2000 Census and Death Certificate data (1990-1991, 1995-1996, 2000-2001). (unpublished data)

	No Educatio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RII (95% CI)	No Educatio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RII (95% CI)
1990-1991					4.1 (3.3-5.0)					1.6 (1.3-2.0)
No. of population	289,797	1,463,217	3,365,313	1,200,503		1,008,275	2,432,198	2,607,479	353,938	
No. of death	5,797	27,084	22,171	4,583		4,533	11,221	7,004	646	
Rate ratio (95% CI)	2.9 (2.4-3.6)	3.5 (3.0-4.2)	1.7 (1.5-2.1)	1.0		2.0 (1.5-2.7)	2.4 (1.8-3.1)	1.3 (1.0-1.7)	1	

11)상대불평등지표는 사회계층별로 서로 다른 인구 구조를 가진 집단에서의 불평등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한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적이나 국가 간 불평등 수준의 비교를 하는데 쓰인다. 이 지표는 가상적으로 집단 내에서 사회계층이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만약 소득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볼 때 상대불평등지표가 5이면, 해당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과 가장 부유한 사람간의 사망률이 5배 차이가 난다는 의미이다.

	Males aged 35-64				Females aged 35-64			
1995-1996				4.7 (3.7-5.9)				1.9 (1.5-2.3)
No. of population	212,106	1,271,312	4,266,554	1,833,145	727,026	2,292,465	3,909,251	665,516
No. of death	7,032	12,906	4,917	483	3,380	18,509	28,783	6,340
Rate ratio (95% CI)	3.5 (2.7-4.6)	4.1 (3.3-5.0)	2.1 (1.8-2.6)	1.0	2.5 (1.9-3.3)	2.8 (2.2-3.6)	1.7 (1.3-2.2)	1.0
2000-2001				4.7 (3.8-5.8)				2.0 (1.7-2.4)
No. of population	202,713	1,091,807	4,812,487	2,510,253	612,979	1,963,073	4,907,860	1,139,455
No. of death	3,960	22,824	27,611	5,257	3,379	8,714	7,998	1,049
Rate ratio (95% CI)	3.3 (2.6-4.3)	3.9 (3.3-4.6)	2.0 (1.7-2.4)	1.0	2.3 (1.8-2.8)	2.4 (2.0-3.0)	1.5 (1.3-1.9)	1.0

* RII: relative index of inequality

○ 이러한 건강 불평등 수준의 변화는 다른 측면의 건강 지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1989년도, 1992년도, 1995년도, 1999년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 평가 건강 수준에서의 상대불평등지표를 계산하면, 더욱 뚜렷한 건강 불평등 수준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음(Table 5, 6 참조). 이는 특히 여성에서 두드러짐.

○ 여성에서의 건강 불평등 수준이 남성에서보다 낮은 이유, 여성에서 건강 불평등 수준의 증가가 보다 뚜렷한 이유, IMF 경제위기 (1997년 11월 이후)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수준의 증가와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 수준과의 관련성 문제 등, 결과의 해석과 추가 연구의 과제가 남아 있겠는 하지만,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 수준이 외국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건강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인 것만은 틀림없음.

Table 5. Changes in age-adjusted education-specific odds ratio and relative index of inequality for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using 1989, 1992, 1995, 1999 Social Statistics Survey data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ales aged 35-64. (unpublished data)

Year		No education	Elementary	Middle	High	College or higher	RII* (95% CI)
1989	No. of the surveyed	1,249	4,373	3,503	5,160	2,361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	31.8	23.2	19.2	14.6	9.5	2.2 (1.8-2.6)
	Odds ratio (95% CI)	3.1 (2.6-3.8)	2.4 (2.1-2.8)	2.3 (1.9-2.7)	1.7 (1.4-2.0)	1.0	
1992	No. of the surveyed	1,040	4,147	3,883	6,193	2,842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	37.7	25.2	18.8	12.4	7.9	3.2 (2.7-3.6)
	Odds ratio (95% CI)	4.7 (3.9-5.6)	3.1 (2.7-3.7)	2.6 (2.2-3.0)	1.7 (1.4-1.9)	1.0	
1995	No. of the surveyed	719	3,436	3,736	7,178	3,471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	35.3	29.0	21.1	14.6	10.4	2.7 (2.4-3.1)
	Odds ratio (95% CI)	3.3 (2.7-4.0)	2.8 (2.4-3.2)	2.1 (1.8-2.4)	1.4 (1.3-1.6)	1.0	
1999	No. of the surveyed	489	2,512	3,019	7,002	3,692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	40.1	28.3	21.2	13.7	8.6	3.0 (2.5-3.6)
	Odds ratio (95% CI)	4.5 (3.6-5.7)	3.0 (2.6-3.5)	2.4 (2.1-2.8)	1.6 (1.4-1.9)	1.0	

* RII: relative index of inequality

Table 6. Changes in age-adjusted education-specific odds ratio and relative index of inequality for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using 1989, 1992, 1995, 1999 Social Statistics Survey data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emales aged 35-64. (unpublished data)

Year		No education	Elementary	Middle	High	College or higher	RII* (95% CI)
1989	No. of the surveyed	4,304	6,975	3,374	2,659	673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	35.4	31.7	28.7	22.0	20.4	1.2 (1.0-1.4)
	Odds ratio (95% CI)	1.5 (1.2-1.8)	1.5 (1.2-1.8)	1.5 (1.2-1.8)	1.1 (0.9-1.3)	1.0	
1992	No. of the surveyed	3,709	6,943	4,192	3,576	887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	40.1	35.2	28.5	21.7	16.6	1.4 (1.3-1.7)
	Odds ratio (95% CI)	2.2 (1.8-2.7)	2.2 (1.8-2.6)	1.9 (1.6-2.3)	1.4 (1.2-1.7)	1.0	
1995	No. of the surveyed	2,729	6,216	4,705	4,829	1,131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	47.6	37.5	29.0	22.1	17.2	1.7 (1.5-1.9)
	Odds ratio (95% CI)	2.8 (2.3-3.3)	2.2 (1.9-2.6)	1.8 (1.6-2.2)	1.4 (1.2-1.6)	1.0	
1999	No. of the surveyed	1,829	4,620	4,009	5,493	1,460	
	Self-rated health (poor or less, %)	51.0	40.6	30.4	20.9	17.5	1.8 (1.6-2.0)
	Odds ratio (95% CI)	2.7 (2.3-3.2)	2.1 (1.8-2.5)	1.7 (1.4-2.0)	1.2 (1.0-1.4)	1.0	

* RII: relative index of inequality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발생 기전

○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발생 기전(mechanism, pathway)은 영국의 1980년 Black Report의 발간 이후,¹²⁾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논쟁은 현재도 진행중임. 발생기전을 밝히는 것은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확한 사회정책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발생기전은 크게 (1) 잘못된 자료의 사용에 기인한다는 인조(人造, artifact), (2) 사회계층이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수준이 좋고 나쁨에 따라 사회계층이 결정된다는 선택(selection), (3) 흡연, 음주 등의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에 의한다는 행태(behavior), (4) 주거 환경,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의 물질적 조건(material condition), (5)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psychosocial factor)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발생기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함. 하지만, 여러 가지 직, 간접적인 근거들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발생 기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센서스 자료와 사망자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사망률 차이에 대한 다수의 연구의 경우, 센서스 자료(사망률 계산에서의 분모 부분)와 사망자료(분자 부분)가 직접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의 차이를 과장하거나 없는 차이를 만들어 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¹³⁾ 하지만, 이미 다른 연구에서 분모/분자에 의한 인조의 가능성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의 가능성(큰 사망률 차이를 오히려 적게 만들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¹⁴⁾ 또한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공·교 의료보험자료 등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사회계층 간 사망률 차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인조(人造)로서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음.

○ 건강수준이 낮으면 낮은 사회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음. 불건강↔빈곤의 악순환의 한 고리를 선택(selection)이라는 설명틀이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선택이 건강 불평등에 기여하는 상대적인 기여도임. 외국의 경우 선택에 의한 건강 불평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주장되고 있음.¹⁵⁾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있는

12) Townsend P, Davidson N, Whitehead M. *Inequalities in Health: the Black Report and the Health Divide*. 2nd ed. London: Penguin Books, 1992.

13)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이 대체로 낮은 성인은 사망 확률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성인은 사망확률이 낮기 때문에, 넓은 연령대에서 센서스 자료와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수준별 사망률을 계산하는 경우, 사망률 차이가 과장되어 나타날 수 있음.

14) Khang YH, Lynch J, Kaplan GA.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Age- and Sex-specific Educational Differences in tials in the 10 Leading Causes of Death. 2003. (mimeo)

15) Davey Smith G, Bartley M, Blane D. The Black Report on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10 years on. *BMJ* 1990;301:373-77.
Blane D, Davey Smith G, Bartley M. Social selection: what does it contribute to social class

경우, 교육수준이 이미 청소년기와 초기 성년기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불건강-->빈곤으로의 선택의 가능성이 봉쇄됨. 우리 나라에서 확인된 교육수준별 건강 불평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과는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설명틀로서의 '선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킴.

○ 낮은 사회계층의 사망률을 높이는 이유 중의 하나로 사회계층 간 생활습관의 차이가 거론됨.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있는 집단이 흡연율도 높고, 건강에 해로운 식사를 하며, 운동도 덜하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됨. 이러한 건강 관련 행태는 건강 불평등의 발생기전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부분적인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995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Alameda 7으로 알려진 흡연, 음주, 비만, 운동, 아침식사, 간식, 수면 등과 같은 건강행태의 차이를 사회계층별로 비교한 연구에서, 상위계층에서 이들 건강행태를 많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즉, 사회계층별 사망률 차이는 부분적으로 사회계층별 건강행태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 하지만, 문제는 역시 건강 불평등에 행태가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하는 점에 있음. 조홍준(1997)¹⁷⁾, 송윤미와 변재준(2000)¹⁸⁾은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등급별 사망률의 차이를 제시했는데, 흡연력, 음주력, 수축기혈압 등의 지표를 보정하였음에도 소득등급이 연령보정 사망률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참조) 즉,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에 행태가 부분적으로 기여하지만, 이것이 건강 불평등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임.

○ 행태로서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건강행태가 건강 불평등의 경로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근본 원인(fundamental cause)은 아니라는 사실임. 행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행태를 결정짓는 사회경제적 근본 원인과 기전이 있고, 이는 특정 시기만의 문제가 아닌 생애를 통하여 결정된다¹⁹⁾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흡연, 식이, 체중조절, 혈압, 콜레스테롤 등 위험요인에만 초점을 둔 임상시험들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작은 효과만을 보였다는 사실은, 이들 위험요인

differences in health? *Social Health Illness* 1993;15:2-15.
Davey Smith G, Blane D, Bartley M. Explanations for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mortality: evidence from Britain and elsewhere. *Eur J Public Health* 1994;4:131-44.
Macintyre S. The Black Report and beyond: what are the issues? *Soc Sci Med* 1997;44(6):723-45.

16) 윤태호. 우리 나라의 사회계층간 건강행태 차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7) 조홍준. 공교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사회계층별 사망률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18) Song Y-M, Byeon JJ. Excess mortality from avoidable and non-avoidable causes in men of low socioeconomic status: a prospective study in Korea.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0;54:166-172.

19) Lynch JW, Kaplan GA, Salonen JT. Why do poor people behave poorly? variation in adult health behaviours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by stages of the socioeconomic lifecourse. *Soc Sci Med* 1997;44(6):809-819.

을 결정짓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²⁰⁾ 최근의 우리 나라의 금연 열풍 또한, 이러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금연에 대한 순응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개될 때, 향후 건강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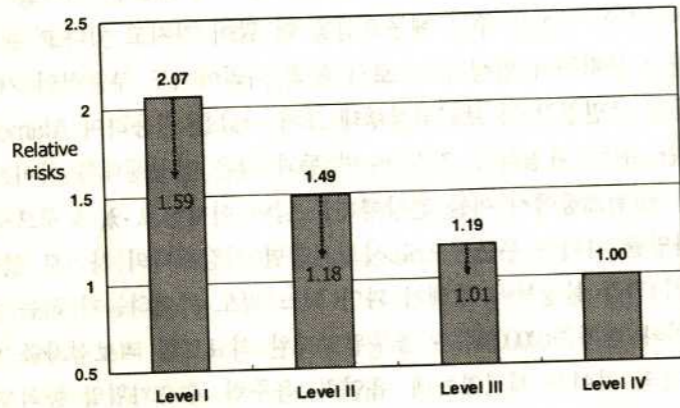


Figure 2. Age-adjusted all-cause mortality relative risks according to income quartile and their reduction by adjustment for occupation, area of residence, cholesterol, systolic blood pressure, body mass index, smoking history, and alcohol intake: 759,665 Korean male civil servants aged 30-64.

* Song & Byeon (2000)에서 그림으로 재구성.

○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대적 박탈감 등 심리사회학적 요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증거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건강 불평등의 발생기전을 심리사회학적 요인에 둘 경우, 구조적으로 피해를 보는 개인을 비난하게 될(victim blaming)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됨.

○ 우리나라에서 건강 불평등의 가장 큰 기전은 아마도 물질적 조건의 차이일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를 증명할 다수의 연구도 필요한 분야임. 주거 환경, 보건의료의 접근성, 운송수단의 선택,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한 경제적 능력 등과 같은 물질적 조건은, 사회적 분포가 여전히 불평등한 상황으로, 최종적으로 이들은 건강 불평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물질적 조건은 단순히 어느 특정 시점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 누적적인 악/순영향을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을 것

20) Ebrahim S. Davey Smith G. Systematic review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of multiple risk factor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coronary heart disease. *BMJ* 1997;314:1666-74.
Ebrahim S. Davey Smith G. Health promotion for coronary heart disease: past, present and future. *Eur Heart J* 1998;19:1751-1757.

임.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성인기 이후의 각종 위험요인에의 폭로 뿐만 아니라 아동기를 포함한 생애(lifecourse)에 걸친 불평등 구조와 이러한 구조에 의한 불건강 요인에의 폭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점임. 한 예로, 우리 나라 공무원교직원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성인기의 키(이는 아동기의 영양상태-사회계층-를 반영한다)는 성인기의 소득수준(사회계층)과 각종 위험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사망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음.(Table 7 참조) 이는 아동기의 빈곤이 궁극적으로 성인기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 증거임.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adult height and 6-year mortality in male Korean civil servants aged 30-64. (unpublished data)

Quintile of height (cm)	No. of subjects	No. of death	Age adjusted			Age, income adjusted			Age, income, risk factors* adjusted		
			Hazard ratio (95% CI)	Linear trend	1cm difference	Hazard ratio (95% CI)	Linear trend	1cm difference	Hazard ratio (95% CI)	Linear trend	1cm difference
174-	125,389	1,923	1.0			1.0			1.0		
171-173	114,671	1,959	1.009 (0.947-1.074)			0.989 (0.929-1.053)			1.011 (0.949-1.077)		
168-170	165,735	3,095	1.017 (0.961-1.077)	<.001	<.0001	0.979 (0.925-1.036)	0.0229	0.0328	1.008 (0.952-1.068)	0.0001	0.0002
165-167	120,022	2,762	1.119 (1.055-1.186)			1.039 (0.979-1.102)			1.080 (1.018-1.146)		
-164	117,203	3,285	1.229 (1.161-1.301)			1.045 (0.986-1.107)			1.093 (1.031-1.158)		

*Risk factors: Body mass index, cholesterol, blood glucose, systolic blood pressure, smoking history, alcohol intake, HBsAg

몇 가지 과제

○ 건강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일차적인 목표는 아님. 다만,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몇 가지의 과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이 가장 우선 순위가 높다라는 점에 누구나 동의할 것임. 그러나 앞서의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건강 불평등 문제는 특정한 기준선(threshold) 아래 계층 만의 문제는 아님. 실제로 모든 건강 지표에 있어서, 모든

사회경제적 위치(직업, 교육수준, 소득 등)에 따라 건강수준이 단계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양상의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건강 불평등은 최근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불평등 구조가 사회의 특정 부문이나 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 속에 만연한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불평등 논의가 '소외계층 논의'로 국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 나라에서 건강 불평등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역사는 찾아보기 쉽지 않음.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는 부분적으로 그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기존 정권의 편향된 시각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환경에 기인한 바 크지만, 주류 보건의료 학문 분야에서의 선형적 시각(예: "인종차별 등 확연한 불평등 문제가 우리 나라에는 없다. 형평 의식이 강한 우리 나라에서 불평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건강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원의 부족과 연구자들의 노력 부족 등에도 부분적인 이유가 있음. 불평등 문제를 불온시 하는 이데올로기 환경이 다소나마 약화된 상황에서, 부분적인 증거이기는 하지만 건강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 관련 연구들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음.

○ 건강 불평등 문제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과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미 외국의 경우, 건강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이미 1985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유럽지구는 건강목표(health target) 설정하면서 건강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명시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50개 유럽국가가 서명을 한 이 건강목표에서는 "국가간 또는 국가 내의 사회계층간 건강 불평등의 크기를 2000년까지 25% 줄인다"고 제시하였음.²¹⁾ 영국 정부가 최근에 수립한 국가 건강목표에서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1) 최빈자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2) 건강 불평등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설정하였고,²²⁾ 미국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는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핵심적인 건강목표 두 가지 중의 하나로 "성, 인종, 교육 수준, 소득수준, 지역 등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²³⁾ 이처럼 국가의 건강목표로 건강 불평등의 해소를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에는, 유럽 선진국은 물론,²⁴⁾²⁵⁾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나라도 포함됨.²⁶⁾

21) World Health Organization. *Targets for Health for All*.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Copenhagen, 1990.

22) U.K. Department of Health. *Saving Lives: Our Healthier Nation. Command White Paper 4386*.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1999.

2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y People 20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24) Lahelma E, Valkonen T. Health and social inequalities in Finland and elsewhere. *Soc Sci Med* 1990;31 (special issue):257-265.

25) SOU. *Equity in Health-The Second Step Towards National Health Targets*. Stockholm: National Public Health Commission/SOU. 1999.

○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많은 정책 과제들의 상대적 중요성 또는 우선순위는, 좀더 많은 논리적 근거(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 다만, 건강/불건강 현상이 특정 시점에 결정되기 보다는 오랜 시간을 걸쳐 누적된 위험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와 청소년에서의 건강 불평등 문제(그리고 세대간 불평등을 양산하는 구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임.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 건강 불평등 문제가 물질적 조건의 차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택 환경, 보건의료서비스, 각종 건강 행위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과 같은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26) Republic of South Africa. *White Paper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Health System in South Africa: Toward a National Health System*. Government Gazette. 1997.

부문토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신자유주의와 교육불평등 심화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 정지위원, 성수중

신자유주의의 효과 (커지는 빈부격차)

- 김대중 집권 5년간 상위 10%의 소득계층과 하위 10% 사이의 소득격차는 6.9배에서 8.9배로 확대되었다.
- 시가 5억 원이 넘는 주택이 10만 채가 넘는 반면, 방 하나에 세 식구 이상 사는 가구는 10만이 넘는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서울에만 약 40만 명(서울시민의 8%)이라고 밝혔다.
-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20%인 12억 명에 이른다.
- 해마다 6백만여 명의 어린이가 5살이 채 안 되어 굶어 죽는다.(전 세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은 8억 4천만 명이다.)
- 빌 게이츠 등 세계 최고 부자 3명의 재산은 가장 가난한 49개국에 사는 6억 명의 연간 소득보다 많다.
- 30년 전 미국의 최고 경영자 1백 명의 평균연봉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9배였으나, 지금은 1천 배가 넘는다.

시장은 합리적이고 깨끗한가?

신자유주의는 시장근본주의다. '규제 받지 않는 시장!' -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제도를 철폐하자고 한다.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없애려 한다. 노동력 시장의 자유를 방해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한다. WTO와 IMF, WB 등이 전세계를 휘젓고 다니며 '자유시장이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시장을 개방하면 빈곤, 저개발지역이 경제성장 할 것'이라고 외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실패했다.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장기불황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비

록 미국의 이윤율은 조금 회복되었을 지라도 구조적인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른바 '거품경제'라고 할 수 있다. 실업과 확대되는 불평등, 엄청난 경제의 불안정성이 사회를 지배한다.(또한 이윤을 위한 자연 수탈은 환경과피를 가속화한다.)

금융자본에 대한 탈규제가 남한의 IMF 위기를 불러 왔다. 그리고 IMF는 더욱 가열차게 신자유주의를 요구했다. 그것은 공공서비스를 다국적 기업의 먹이로 제공하라는 것이다. 12조원의 가치가 있는 대우자동차는 GM에 9천5백 억에 팔렸다.(부평공장의 땅값도 안 되는 돈이다.) 18조의 부채는 국민부담으로 남았다. 가스, 발전, 전기, 철도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그것들의 매각 양상이 대우차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다. 물질적 풍요를 약속했던 러시아와 동유럽에는 평균수명이 단축되고 문맹률이 증가했다.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이끌던 일본과 아시아의 4마리 용은 '정실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바꿨지만 불황과 침체를 겪고 있다. IMF의 모범적 교과서라고 칭송 받던 아르헨티나는 경제적 파산과 정치적 불안정의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시장의 깨끗함과 효율성'은 거짓말이다. 미국 최고경영자 100명의 평균연봉이 평균노동자의 1천 배 이상이라는 것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기업은 자유거래를 내부화한 비 시장적 조직이다. 기업은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라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폴 크루그먼이 지적한 대로 'CEO의 연봉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이사들 간의 보이지 않는 악수가 결정하는 것'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비 시장적 조직이다. 그러나 어떤가? 대표적 투기금융회사인 LTCM이 위기에 몰렸을 때, 미국 정부가 앞장서 대출해 주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정이 어려울 때, 국가가 앞장서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 제노바에서 벌어진 반세계화 시위에서는 국가 경찰이 시위대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 미국과 영국은 석유회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중동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화폐로 불리는 '신용'은 어떤가? 그것은 사람 사이의 '끈끈한 정 - 믿음'을 뜻하는 용어는 아닌가?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벌어진 엔론과 월드컴의 파산 사태는 미국시장이 개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시장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경쟁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 합법, 비합법, 테러가 판을 치는 곳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는 자유로운 시장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질서는 '보이지 않는 악수'와 '보이지 않는 주먹'이 만들어 낸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로운 시장'은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이데올로

기일 뿐이다.

- 국가 규제로부터 자본의 자유 : 그 동안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의해 양보했던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 노동에 대한 자본의 자유 : 노동시장 유연화(해고의 자유, 노동조합 해체, 비정규직 증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가능한 모든 것을 팔아치워라! 이윤만이 살 길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지난 몇 년 사이 교육계에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전에는 국가 주도의 공교육이 가진 경직성(확일성), 비민주성, 전근대성(권위주의)에 맞서 민주화와 자유, 다양성을 위해 싸우던 교직원 노동조합이 최근에는 공교육 사수의 선봉이 된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교육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발표되었다. 때를 맞춰 천연자원, 지하자원처럼 사람도 경제 활동의 원료로 규정하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했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경제적 이윤 추구가 '교육개혁'의 최대 원칙으로 작용했다. '전면적 인간 발달', '전인교육', '기초 소양을 갖춘 시민 양성'은 공문구로 전락했다. 바로 신자유주의의 원리가 교육계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포장되어 제시되었다. '자율성 확대', '다양성 증가', '선택권 보장', '창의적 학습', '교육개혁' 등등...

그런데, 나타나는 현실은 국가로부터 자본의 자유, 노동에 대한 자본의 자유, 노동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고, 이는 결국 교육의 공공성 후퇴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

7차 교육과정

지금은 지식기반 사회이므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지식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10학년까지 공통교육과정을 '수준별학습'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교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의 골자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프랑스(현재는 그것도 많이 후퇴했다고 하지만)에서는 '가장 적게 가진 자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자'라고 하며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교육 활동의 중심이 있다. 그것이 프랑스의 '수준별 학습'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공부 못하는 애들 틈에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능력 계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교육 재화를 집중 투자한다. 이른바 수월성 교육

으로서 학벌사회를 부추기고 학생들을 성적으로 서열화한다.

수월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은 학원과 과외 열풍을 부른다.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산수에도 급수를 매긴다.(태권도의 급수처럼)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학생들은 시달린다. 돈 있는 자가 유리하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교과목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학'이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완성되는 2005년 수능을 보게될 고2의 선택과목은 수능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한 과목들로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려면 학교의 규모가 엄청 커져야 한다. 계산에 의하면 한 학교가 150학급 이상, 학생 수가 6천 명 이상이 되었을 때, 선택 중심형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다. 결국 내신 성적을 위한 선택과목, 대입을 위한 선택과목을 모두 수강해야하므로 학생들의 수업 부담만 가중되는 셈이다.

7차 속에 놓여온 학교와 실업계 학교에 대한 보장은 없다. 현실적으로 빈곤층 가정의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 진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때, 이미 불평등은 고착화될 조짐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3학년들은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들처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취업연수를 한다. 그들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초3, 중3 학력평가(또는 학업성취도 평가)

수준별 학습, 자율성 확대에는 국가 수준의 통제가 전제되어 있다. 전국단위의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학교 서열화, 학생 서열화, 교사 서열화를 조장하고 경쟁을 부추긴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전국단위의 경쟁에 시달려야 하고, 현재의 고등학교가 대입에 맞춰 왜곡되어 있는 것만큼 '학력평가'라는 국가수준의 시험에 맞춰 교육과정이 왜곡될 것이다.(벌써부터 그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성취도 평가에서 성적이 낮게 나온 전남도교육청은 구호를 '실력전남'으로 내세우고 일선학교들을 옥죄고 있다.) 경쟁이 강화되면 사교육비는 증가한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부자들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국립대 민영화(학교단위 독립회계제도)

이미 익숙해졌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대학교에 차를 가지고 와도 주차비를 내지 않았다. 공공재였던 학교가 기업형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사립대학교들은 그나마 이해가 된다고 쳐도 국공립대학은 왜 그럴까? 중,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대회라도 열려면 운동장 사용료를 내야한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우리 나라에는 사립학교가 많다. 대학교의 90%, 고등학교의 60%, 중학교의 40%가 사립학교다. 과거부터 학교가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사학을 줄이고 공립학교를 확대하기는커녕 있던 국,공립마저 사학으로 만들려 한다.

항목별로 통제하던 학교 회계를 이제 몽텅이 돈을 떼주고 알아서 운영하라고 했다. 대학교에서는 서서히 국가 부담분을 줄여나가고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사립대학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미 상당히 인상된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는 대학생이 증가했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독립 회계제도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것이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신자유주의 교육이 확대된 영국의 사례를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성적이 낮은 학교에 예산을 줄여서 압박하고 성적 경쟁으로 몰아댄다. 예산이 적으니 교육의 질은 더 떨어지고 급기야 학교 폐쇄까지 하게 된다. 주로 가난한 지역의 학교가 성적이 낮다. 가난한 학생들이 질 낮은 교육을 받는다. 심지어 폐쇄된 학교의 아이들은 주변학교에서 학교 성적이 낮아질까봐 입학할 허용하지 않는다. 매년 5만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 통제

실제로는 자본(기업), 대학의 선택권인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사 노동력의 유연화'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노동의 유연화는 해고의 자유다. 교사의 위치가 불안한데,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정년단축 : 나이 든 교사 1명을 줄이면, 같은 값으로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나이 든 교사는 학생들을 못 가르치고, 학생들이 나이든 교사를 싫어한다고 선전했다.(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교사를 선호하는 프랑스나 뉴질랜드 등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오히려 정력적인 학원강사가 더 절실할 것 같기도 하다.) 수많은 교사들이 쫓겨났지만, 신규교사는 나이든 교사 1명에 0.8명을 채용했다. 초등학교는 교사가 부족해서 중학교 교사로 교육받은 사범대생들을 꺾다 썼다. 이미 퇴직한 선생님들을 다시 학교로 불러다 기간제(계약직) 교사를 맡겼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실력없는 선생님들이 되는 통에 교사의 위신은 추락하고, 교직사회는 정신적 공황에 빠졌다. 열심히 일할 땐 '산업역군', 늙거나 다치면 '산업쓰레기' 취급 받는 사회가 된 것이다.

●계약직 확대 : 몇 년 사이에 계약직 교사가 많아졌다. 사립학교에서는 10%의 계약직 교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정부재정보조에서 혜택이 있다.

●성과 상여금 : 임금으로 인상되어야 할 돈이 상여금으로 지급되면서, 각 교사별로 성과를 차등화해서 지급하라고 했다. 전교조가 차등화해서 받을거라면 차라리 반납한다며 적극 투쟁을 했고, 균등한 수당처럼 되었다.

●교원 지방직화 시도 : 국가 공무원인 교사를 지역별로 차별화시키려고 시도했었다.

자립형 사립학교(자율학교)

재정자립도가 있는 학교에 대하여 학생선발권을 주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

며, 등록금 책정을 자유롭게 하고, 교사 선발권(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도 주는 제도이다. 재단전입금이 거의 없는 사립학교 재정 현실을 고려하면 등록금 자율화는 대학 등록금을 능가하는 등록금이 될 것이며, 입시 전문 학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귀족학교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전교조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로 전면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자율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비슷한 공립 학교다.(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명문공립학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학교(교육개방)

외국인만 내세우면 일반법인도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예산 전용이 가능해지면 기업의 자회사처럼 된다. 운동장 없는 학교가 가능하다. 기존의 입시학원이나 어학원이 외국인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국어와 역사를 주당 1시간씩만 하면 국내교육과정으로 인정받는다. 입시학원이 국어, 역사만 가르치면 정규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등록금 제한 규정이 없다. 현재 입학규정은 해외거주5년 이상이나 변경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모든 학교 행정을 중앙 전산화시켜서 교사와 학생의 신용 정보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으나, 획일적 통제가 간편한 제도이다. 현재 거부 투쟁이 진행 중이다.

저항의 세계화

정부는 3월말까지 WTO에 제출할 교육개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관례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와 교육개방이 대세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안은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임에 틀림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학교도 야만의 상태로 끌고 간다. 가난한 자들은 뚝뚝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사들에게 질 낮은 교육을 받고, 버려진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다가 비정규직 직업을 얻고, 가난에 속에서 허덕일 것이다. 그들의 자식들도 같은 길을 밟는다. 부자들은 차별화된 학교(자립형학교, 외국인학교)에서 석박사 교사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고, 비싼 과외를

받으며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의 지배층이 될 것이다. 그들의 자식들도 같은 길을 밟는다.

1989년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는 끝났다.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보수주의)는 참고 견디기엔 너무 비참하다. 이제 우리는 다른 세계를 원한다. 그리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시작한 반자본주의, 반세계화의 흐름은 2000년 9월 프라하로, 2001년 1월 포르투알레그레(세계사회포럼), 2001년 7월 제노바(30만 시위), 2002년 1월 2차 세계사회포럼(7만), 2002년 11월 피렌체(유럽사회포럼 100만시위)로 이어졌다. 1월 23일 포르투알레그레에서는 제3차 세계사회포럼이 열릴 것이다.(개최되었다.)

여성운동가, 환경운동가, 반전운동가, 종교탄압 철폐, 인종차별철폐, 동성애자, 노동자 등 그 동안 다양한 쟁점에서 따로 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전 세계은행부총재)는 남한이 IMF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격침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남한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도 노동계급의 저항에 부딪혀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변형이 되었고, 학력평가는 부분적으로 실시, 자립형사립고 부분적 시행, 성과급 수당화, 교원지방직화 무산이 그렇다. 신자유주의는 대세가 아니다.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공교육의 파산을 뜻한다. 비참한 교육불평등과 야만의 상태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학교를 멈추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대학을 포함한 학교 평준화 정책을 확대하고, 교장 선출을 통한 학교 민주화, 학생들의 교육행정 결정권 행사 등 수월성과 국가경쟁력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학교제도를 위해 다함께 행동하자.

유럽사회포럼의 조직위원 중 한 명은 '8,90년대 남한의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 그러나 요즘 남한의 노동계급이 신자유주의에 필요 이상으로 위축된 것 같다.'고 충고 했다.

가깝게는 계속 되는 반미 촛불 시위에서, 국가권력과 결탁한 기업의 노조탄압으로 분신하고 배달호 동지의 추모 집회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한국정부의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시위에서 우리는 함께 행동할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노숙자 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주영수 인의협 공동대표

■ 노숙자 건강관리에 대한 초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장보호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함.
- 주제별 관리체계 구축 - 알코올 중독자 관리, 정신질환자 관리, 결핵환자 관리를 각각 별도의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일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공식화 - 1차, 2차, 3차의 노숙자 의료전달체계의 공식화와, 구축될 주제별 관리체계와의 원활한 연계가 매우 중요할 것.

■ 세부 주제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 알코올 문제 - 전체 노숙자의 20%로 추정
- 정신질환자(주요 정신병) - 전체 노숙자의 10%로 추정
- 결핵환자 : 전체 거리 노숙자의 4%로 추정 (이용시설 내 노숙자는 1-2% 정도로 추산)

■ 의료비 관련 재정조달 방안

- 단기적으로는 의료구호비 증액을 통해 문제 해결
-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체계로의 편입 (특례규정 적용)

1. 알코올 중독자 관리

1) 문제의 규모 : 알코올 의존성은 노숙자의 64.1% (인의협 조사자료, 2001)이며, 알코올 중독자는 노숙자 중 대략 40%, 중증 알코올 중독자는 노숙자 중 대략 20%를 상회함. 이들 중 일정정도는 '사회경제적 소외' 못지않게, '알코올 중독'이 노숙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표. 노숙자 알코올 관련 건강실태 (NAST)

	조사자 대상자	알코올 중독 의심	중증 알코올 중독 의심
2002년 3월	45명	14명 (31%)	10명 (22%)
2002년 4월	314명	100명 (31%)	58명 (18%)
2002년 5월	286명	106명 (37%)	67명 (23%)
2002년 6월	228명	90명 (39%)	54명 (23%)
2002년 7월	268명	109명 (40%)	64명 (23%)
2002년 8월	131명	42명 (32%)	29명 (22%)

* 서울 자유의 집 알코올 상담센터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 결과' 자료 인용 (2002. 9.)

2) 문제의 중요성 : 현재 유병규모가 매우 크고, 개인의 신체건강의 황폐화와 이로 인한 치명적 신체손상이 가능

3) 알코올 중독자 관련 보호체계

가. 알코올 현장 진료소

- : 서울역, 영등포역 (혹은 지방 대도시) 등 노숙자 밀집지역에 1곳씩 설치
- : 진료기능 (진단, 투약, 주취자 응급시설이나 알코올 전문기관으로의 후송)
- : 사례관리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신보건간호사 배치)

나. 알코올 환자 중간 보호시설

: 알코올 진료소와 연계하여 거리현장에 근접하게 위치하여 응급적인 사회복지-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는 시설

다. 알코올 전문 쉼터

- : 전문의료 서비스, 심리재활 프로그램, 공동체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 : 쉼터의 형태이든, 별도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든 다양하게 시도

라. 알코올 센터 구축

- : 인적구성 -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전문요원
- : 기능 -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 '심리-재활 접근'의 전문적인 기능 담당
- : 역할 - '알코올 현장 진료소', '중간(일시) 보호시설' 간의 연계 및 supervision
- '알코올 전문 쉼터(작은 규모)', '별도의 주거 서비스 제공과 자조집단(큰 규모)' 간의 연계 및 super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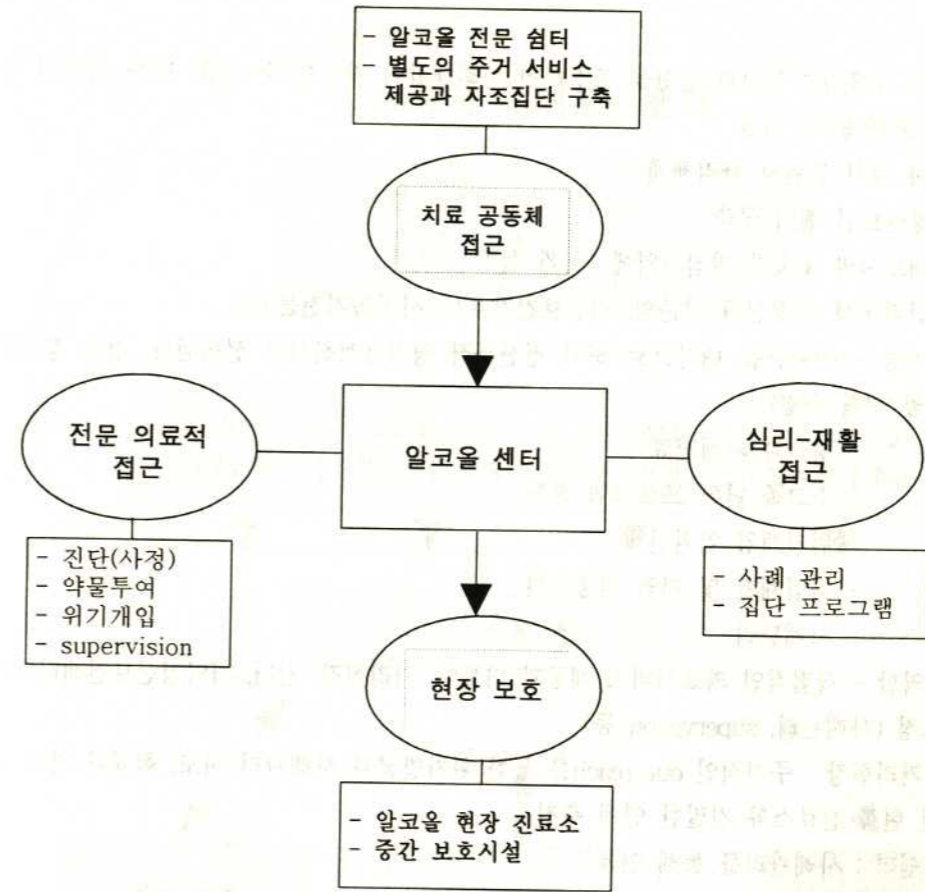


그림. 노숙자 알코올 센터와 중독자 관리체계

2. 정신 질환자 관리

1) 문제의 규모 : 전체 노숙자의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표. 정신심리적 이상자 실태, (SCL-90-R 검사결과 : 자유의 집, 2002)

년도	전체 검사자	이상자 (%)	정신증 (%)	편집증 (%)	공포 불안 (%)	적대감 (%)	강박증 (%)	대인 예민성 (%)	우울증 (%)	불안 (%)
1999	942	94(10.0)	42(4.5)	28(3.0)	36(3.8)	15(1.6)	16(1.7)	23(2.4)	33(3.5)	37(3.9)
2000	2,861	340(11.9)	143(5.0)	105(3.7)	149(5.2)	40(1.4)	66(2.3)	99(3.5)	142(5.0)	121(4.2)
2001	1,715	269(15.7)	106(6.2)	77(4.5)	117(6.8)	24(1.4)	64(3.7)	71(4.1)	110(6.4)	100(5.8)